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자도입

박정희시대와덩샤오핑시대를 중심으로



2013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두 문 남

정 치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과 외자도입

박정희시대와 덩샤오핑시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성 봉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2 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두 문 남

두문남의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2월 24일



주 심 정치학박사 이 대 희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위 원 정치학박사 하 봉 규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기존 연구 검토.....	2
3. 연구 범위 및 구성.....	7
II . 경제성장과 외자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	8
1. 외국 직접 투자.....	11
2. 외국 간접 투자.....	12
III . 박정희 시대 와 덩샤오핑 시대 외자도입 의 배경 비교.....	13
1. 한국 외자도입의 배경.....	13
2. 중국 외자도입의 배경.....	18
IV . 박정희시대 와 덩샤오핑시대 외자도입의 방식 및 전개 비교...	23
1. 한국 외자도입의 방식과 전개.....	23
(1) 한국 외자도입의 방식.....	23
(2) 한국 외자도입의 전개.....	29
2. 중국 외자도입의 방식과 전개.....	32
(1)중국 외자도입의 방식.....	32
(2)중국 외자도입의 전개.....	42

V . 박정희 시대 와 덩샤오핑 시대 외자도입의 성과 비교.....	46
1. 한국외자도입의 성과.....	46
2. 중국외자도입의 성과.....	51
VI . 결론.....	55
참고문헌.....	61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academic dissertations on the research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so far. However, most of the research focused on the influence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has on that of China. There are also many dissertations which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achievements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in the 1980s. Nevertheless, there are few dissertations comparing the influence of the background, modes, process and achievements of foreign investmen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Among the countries which are developing rapidly in Asia, the times of Park Chung Hee in Korea and the times of Deng Xiaoping in China have received much concern. Because of different social systems, different areas and different national situations, these two countrie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each in the development process. Therefore, the present research compares the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background, modes, process and achievements in these two countries with the hope of being helpful to people who will do research in this area late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아시아에서 신속히 발전한 나라인.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한, 특히 한국의 박정희 시대와 중국의 덩샤오핑시대를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이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 경제성장은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성공사례로서 이야기 된다. 60년대초 한국 국민의 소득은 1인당83달러였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부터 겨우 복구된 가난한 농업사회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이당시의 국민의 의식은 정치 발전 보다 경제 성장을 더욱 선호하였다. 그 결과 1962년~1979년 까지의 박정희 정권은 18년 이라는 임기동안 연평균9.3%라는 고도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이 1961년83달러에서, 1979년20배에 달하는 1,640달러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켰다. 또한 수출은 1961년4000만 달러에서 1977년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즉, 박정희 정부는 국가적 기업의 형태로 한국 경제는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한편 중국은 1949년 건국이후 전반적으로 각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중국은 대외적으로 취약함을 노출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분열을 경험하였으며, 또 인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을 겪었다. 하지만 현재는 가난하고 낙후했던 면모를 바꾸었고 국제적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인민 생활도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이에따라 중국은 세계의 중요 문제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갖게 되었고, 중국의 참여 없이는 원만한 해결을 개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된데에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부터 세계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했으며, 냉전해소 이후 형성된 세계의 다극화 추세에서 중요해진 데에도그원인이있다. 그러나 이보다 큰 이유는 개혁개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여러 서적과 그 시대의 신문 기사를 보면 박정희와 덩샤오핑의 영향력은 한국과 중국의 모든분야에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박정희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인터넷 기념관’ 까지 만들어졌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오직 박정희의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많은 자료와 사이트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보면 박정희는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번신물망 모택동 치부물망 덩샤오핑’ (翻身 勿忘毛泽东, 致富 勿忘邓小平)이라는 말이 있는데, 번신은 몸을 뒤집는다는 말로 신분이 바뀐 것을 뜻하고, 치부는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한다. 신분이 바뀐 것은 모택동을 잊어서는 안되고, 잘살게 된 것은 덩소핑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즉, 모택동이 인민들을 번신(정치적 해방)시켰고, 덩샤오핑은 인민들을 치부(경제적 해방)하게 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모택동은 구질서는 깨트리고(破) 신중국을 열었다. 덩샤오핑은 그 바탕 위에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立), 그래서 중국 역사가들은 모를 ‘(破)의 지도자’ 등을 ‘(立)의 지도자’ 라고 부른다.¹⁾ 양국사람의 마음에 박정희와 덩샤오핑은 희망이었고 등불과도 같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의 박정희 경제개발 정책과 중국의 덩샤오핑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서 양국의 고속 경제성장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 논문 주요 쟁점인 외자도입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고, 한국과 중국 외자도입의 배경은 무엇이며, 또 한국과 중국의 외자도입의 방식, 전개과정, 성과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한다.

2. 기본연구 검토

이제까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논문들은 양국의 고속경제성장원인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 와 중국이 배울만한 점에 관한 연구위주로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경제성장관련 연구는 1980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어떻게 고속성장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박정희 시대에 경제고속성장 과 중국 덩샤오핑시대 개혁개방에서 양국 고속경제성장의 제일 중요한 원인인 외자도입의 배경, 방식, 전개, 성과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비교연구하는 논문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 다만, 박정희 경제개발과 덩샤오핑 개혁개방 위주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가 일부 존재하며, 논문을 전개하는

1)장세정, “등소핑을통해보는개혁개방.” <http://blog.joinsmsn.com/media/index.asp?uid=zhshzh> (검색일: 2012.10.4)

데 있어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기존 연구자료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연구자료 중 『改革開放30年-決定當代中國命运的重大抉擇1978-2008』(中英雯獻版), 『中國改革開放叁十年』(辽宁出版社), 『改革開放三十年重大決策始末』(張神根。端木清華。四川人民出版社), 『交鋒:當代中國叁次思想解放實錄』(馬立誠, 凌志軍), 羅元錚, 『世界經濟與中國』(長沙:湖南人民出版社, 1983), 胡征慶, 『中國對外開放政策』(成都:成都科技大學出版社, 1989),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박정동 『중국경제입문』 등이 중국의 개혁개방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한국의 박정희 연구의 자료는 일기와 저서 같은 박정희의 개인기록, 대통령연설문 등 한국정부의 공식기록, 박정희 관련인사들이 남긴 회고록과 같은 적지 않은 개인 기록들을 남겼으며, 부분적인 일기는 박정희 대통령 인터넷 기념관에 공개되어 있다. 박정희 본인이 직접 쓴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1962), 『국가와 혁명과 나』(1963), 『민족중흥의 길』(1978) 등은 그의 사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저서들이다.

박정희 관련 전기도 무수히 많다. 조갑제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²⁾와 『박정희: 한 근대화혁명가의 비장한 생애』³⁾ 1~133)은 전기류의 저작 가운데서 박정희의 생애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김관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강행우 『한국경제론』,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등이 있으며, 중국에서 출판된 박정희의 전기로는 미국적 한국인 피터 현이 쓴 『박정희』가 있다. 오원철이 한국형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형 경제건설』⁴⁾ 1~74)과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⁵⁾ 김성진, 남덕우 등이 펴낸 『박정희 시대』도 경제건설 연구에 관해 좋은 자료가 된다.

참고자료를 정리하며, 한국과 중국이 고속성장을 달성할수 있게된 원인 중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외자도입이다. 먼저 한국의 외자도입의 배경을 보면 한국 외자도입의 배경은 대내적 배경과 대외적 배경으로 나눈다, 심주형과 김관희는 “내적배경은 전쟁 이후 한국경제는 악성순환으로 진입하였는

2)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서울: 조선일보, 2001), pp. 1-8.

3) 조갑제, 『박정희: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서울: 조갑제닷컴, 2006), pp. 1-13.

4)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서울: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pp. 1-7.

5)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서울: 동서문화사, 2006), p. 33.

바, 저수입 → 저저축 → 저투자 → 저재산 → 저소득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고,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화, 가속도 발전 및 실업의 증가로 한국의 경제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갔다.” 라고 서술하였으며, 강행우는 “외적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의 경제가 복구 되었더라도 미국은 경제적 쇠퇴와 무리한 대외팽창정책으로 군사비 지출, 군사, 경제 원조 지출로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어감에 따라 한국에 대한경제정책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서술하였다.

중국의 외자도입의 배경도 내외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배경은 (장주원)Zhang Zhuoyuan, (로원전)羅元錚, (리처드바움)Richard Baum이 설명 하듯이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은 정치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해온 덩샤오핑이 집권함으로써 가능하였고, 덩샤오핑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경제발전이었다. 중국은 당시 산업기술 수준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기법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런데 경제발전은 체제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능률적 제도의 바탕 위에서 투입될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자본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것은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 목표의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외부적 배경으로 오용석은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1970년대말부터 추진하게 된 데는 그때의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정세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그 당시에 중국의 안보상황은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팽창주의로 인하여 크게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중시했던 제3세계와의 연대는 큰 힘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는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세력을 중국은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가장 적합한 연합의 대상으로서 미국과 일본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을 급속히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외자의 도입이었다. 김광희, 리영희, 임헌영이 서술한 한국외자도입 방식으로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추진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경제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발전자금 기술과 시장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은

날로 강렬하여졌고,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서이다. 다른 시각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정권의 정통성 부재라는 정치적 한계를 경제발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베트남과병은 경제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돌파구였다. 따라서 베트남과병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열악한 산업기반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박정희 정부의 정통성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조준현 백권호은 중국의 외자도입의 방식에서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데는 두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로부터의 자금도입에 의한 간접투자이다. 간접투자는 외국 정부차관, 국제금융기구 차관, 해외 공채발행의 3가지로 구성하였고, 중국이 대외 개방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투자환경은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며 외자도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특히 1992년 봄에 등소평이 소위 남순강화를 발표한 이후, 외자는 폭발적으로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수단은 주요 경제특구의 개방과 FDI정책의 실시이다.

이회석은 한국의 외자도입의 전개과정을 3 시기로 나누었다. 제1시기(1959-65년)는 이른바 외자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기이다. 제2시기(1966-72년)은 상업차관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제3시기(1973-79년)는 차관원리금의 상환압박에 부딪치자, 정부는 두 가지 정책대안으로 타개를 시도했다. 하나는 차관을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의 강화를 통한 원리금 상환 능력의 확대였다. 19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게 된다

백권호는 중국 외자도입의 전개 과정 역시 3개기간으로 나누었다. 1. 직접투자 도입기(1978~1983): 이 시기에는 개방정책의 발표와 함께 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구상이 제시된 시기이다. 2. 직접투자 촉진기(1984~1989): 본격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시작된 시기이다. 3. 직접투자 확산기(1992~2000): 이 기간 동안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이다.

강행우, 김일영, 김광희가 말하는 외자도입의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1962년10월과11월 두차례에 걸친 김종필-오히라 회동에서 일본측이 한국에 제공할 금액으로 ‘무상3억 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차관1억달러’라는 메모가 작성됐고, 한국정부가 베트남과병을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직·간접 지원과 베트남전쟁 특수활용, 그리고 국내기업과 근로자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효과 등을 계산할 경우 총 외화수입은 대략 5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한다. 또한 외국의 차관 및 투자증가,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경험획득 등 간접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결과적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훨씬 초과한 연평균8.5%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백권호. 박정동은 중국의 외자도입의 성과는, 정부차관면에서 볼 때, 1988년5월까지 중국이 얻어낸 10여개 국가의 정부차관은 일본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정부차관의42.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이탈리아로 20.8%, 프랑스가8.1%, 캐나다가6.9%, 영국이6.6%이다. 1988년8월 다케시다일본수상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8천1백억엔(약61억달러)의 정부차관을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게 했다. 외자투입의 구조로 볼 때, ‘삼자기업’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이전되지 않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리 재능과 수출의 길을 충분히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계, 전기공업, 경공업, 방직 등 전통산업의 기술개조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자투입지역으로 볼 때, 대외차관을 사용하는 건설항목의 선정은 중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자금투입지역이 비교적 분산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의 투자기업은 모두가 중국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측에서FDI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1. 투자자금의 도입, 2. 선진적 기술도입, 3. 합리적 경영방식의 흡수, 4. 고용확대 5, 외자획득이라는 효과이다. 20여 년간에 걸친 대외 개방정책의 결과 대량의 외자가 중국에 유입되었다. 특히 1992년 이래 외자의 중국진출은 눈부시다. 외자는 이 시기의 중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경제의 국제화, 시장화의 진전, 기술이전과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수출진흥, 고정자산투자의 확대, 고용의 창출, 향진기업과의 합병과 국유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국내기업의 활성화 등이 외자도입이 중국경제에 미친 효과로 지적된다.

3, 연구 범위 및 구성

본논문의 연구범위는 1978년에 시작된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개방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경제는 이전에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와 같은 속도로 빈곤을 퇴치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을 기점으로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중국적 특색을 지니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는 30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 중심의 못사는 나라로 분류되던 중국이 나아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내 총생산이 곧 미국을 능가하여 전 세계의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전망이 강력하게 대두되고있다,

한국은 휴전 직후 세계최빈 농업국가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대외지향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달성하였다. 대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과 대외개방정책을 적절히 배합하여 상승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주역이 되었다. 한국이 단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남다른 경제개발정책이 있었다.

본 논문은 주요양국의 경제성장의 제일 큰 원인인 외자도입의 배경, 외자도입 방식을 분석하는데 실증적인 대비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양국 경제 고속성장시기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학계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균형적으로 분석하여 상관문제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연구배경 및 목적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연구범위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국 외자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제4장은 양국 외자도입의 방식및 전개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외자도입의 성과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제6장은 위의 각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중 양국의 정치 정책은 동북아 국면의 영향을 강조함으로 이 논문의 중요성을 귀납한다

II.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

외자란 외국에서 도입된 자본 즉 그 소유국가 외국인인 자본으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된 차관 및 외국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차관은 국제간의 대부, 즉 자금조달 행위를 말한다. 차관에는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이 있는데, 공공차관이란 정부가 직접 또는 법인이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 경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하며, 상업차관이란 민간부문이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자본재·원자재를 말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투자자가 직접 대외지급수단 또는 국내지불 수단 및 자본재를 출자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관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의 주요 원천으로, 자본에 대한 절실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본다면 차관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저하게 다르다. 즉 외국인직접투자는 소유와 경영이 외국투자자에게 귀속되고, 그 존속기간이 외국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여 원본을 회수할 때까지 부정기적인데 반해, 차관은 자금의 소유는 외국자본 공여자이지만 경영은 국내기업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존속기간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상환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다. 한편 자본비용은 차관이 이자 및 약정수수료 등의 형식으로 지출되는데 반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이익배당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윤을 내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이윤이 없는 때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차관은 비용이 고정되어 경기침체 기간에는 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그리고 외자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차관에 비해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지닐 수 있으며, 선진경영기법 및 제품생산기술의 이전, 그리고 기술자 훈련의 기회가 생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의 종속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외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시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외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Two-Gap모델은 외자도입이 개도국이 안고 있는 저축부족과 외환부족이라는 두가지 갭(Gap)을 동시에 해결해 줌으로

써 경제성장의 촉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외자도입은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가능케 하는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그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외자도입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임금인상을 가져와 노동소득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기여함으로써 소득분배를 향상시킨다고 한다. 이에반해 외자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외자도입은 대내적으로 국내저축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개도국의 일부 특권 엘리트층에 혜택을 편중시켜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본 공여국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입장에서는 외자도입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있다.

그러나 외자의 효과는 도입된 외자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소득분배도 개선시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성장은 오히려 둔화되고 대외채무는 누증되며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적 간섭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자도입의 경제적 효과는 어떠한 현실적 필연성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 및 각국의 고유한 제도적 특징에 따라 외자도입정책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외자와 국가능력의 관계에 관한 설명방식으로는 신고전파 경제이론과 종속이론, 종속적 발전이론, 그리고 국가중심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전파 경제이론(Neo-Classical Approach)에서는 외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 즉 국제자본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이동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권력의 범위와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기구의 합법적인 지배권의 제한과 함께 국가능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종속이론(Dependency Approach)에서는 중심부국가와 주변부국가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외자의 흐름은 주변부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국제환경은 경쟁하는 결정적 구조로서, 중심부국가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중심부국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반해, 주변부국가에서의 이윤이 중심부국가로 누출됨으로써 주변부국가의 능력을 약화시

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가지 설명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의 결과에 중대한 원인변수가 될 수 있는 국가의 역할, 그리고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정치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의 시장개입능력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종속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이론에 의해 외자가 외자수입국의 국가능력을 필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관점은 도전을 받게 된다. 브라질의 종속적발전 에 관한의 경험적 연구에서 볼 때, 국가는 다국적기업 및 국내자본과 3자동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국가의 자본축적을 실현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기계적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론이 주장하듯이 외부세력에 대해 기생적이고언제나 약한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제거하고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강한 국가의 능동적 역할은 종속적 발전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즉 외자유입은 국가관료제의 발전을 자극하고 국가는 다국적 기업의 동맹자가 되며 외자와 #국내 경제간의 중요한 매개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Evans와 Stephens는 신비교정치경제론(New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을 통해 경제발전과정정치발전은 서로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국가가 행위하는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국내 경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위를 어떻게 보장해 왔고 선진자본이 국내 산업구조에 어떻게 침투해 왔으며, 산업화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 왔는지에 있어서 각국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느냐에 따라 각국의산업화전략 및 외자도입정책이 상이한 모습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설명방식으로는 국가중심론을들수 있다. 이 접근법에서는 신고전과 경제이론이나 종속이론의 세계경제의 성격에 관한 단순한 논리적 가정을 모두 비판한다. 즉 국가가 외적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국내 경제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변형시키는가에 따라, 세계경제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것으로 국제적 환경보다는 국내 정치나 제도적 요인들이 연구되어야 할 주요 변수라

고 보는 것이다. 국가중심론에서는 정치과정에서 국가를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시킴으로써, 국가는 사회로부터 독립된 실체로 자신의 독자적인 선호를 지니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자본축적을 위해 재정정책, 통화정책, 산업정책 등과 같은 실질적인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한다는 것이다.⁶⁾

1. 외국 직접 투자

직접 투자는 한 나라의 투자자(제조·판매 회사, 개인, 정부 포함)가 해외에 투자하여 기업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투자 수익을 얻는 일이다. 직접 투자에는 주로 다음4가지 형식이 있다.

1. 비투자국의 기업을 매수하거나 합병한다.
2.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신기업을 개설하거나 전액 외자 회사를 설립한다.
3. 자본 또는 기술을 투입해서 현지의 투자자와 합작 기업을 설립한다.
4. 비투자국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그 주식 지배권을 얻는다.

서방 시장경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이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직접 투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나라는 25%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나라는 보유 주식비율이 25% 이하이더라도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면 똑같은 직접 투자로 보고 있다,

1. 투자 기업에 관리 또는 기술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2.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3.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4. 그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5. 자금을 재원하고 있다.
6. 보상 무역 형식으로 대여 또는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국이 직접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투자를 받아들이는 초빙국에 좋은 투자 환경과 조건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지, 명확한 투자보호법이 있는지, 환경 조건이 완비되어 있는지, 경제 발

6) 소 주 현 . “한국의 경제 발전과 외자 도입 정책.” <http://naver.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DMT1200002352&sysid=nhn> (검색일 2012. 10. 01).

전의 앞날이 밝은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직접 투자는 일관해서 서방 선진국의 자본 수출의 주요 형식이 되어왔다. 70년대 들어서 국제 경제가 갈수록 일체화 되어감에 따라 직접 투자의 규모는 날로 확대되어 투하되는 지역이나 나라도 점점 넓어졌고 투자 방식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유럽·미국 등 여러 나라는 직접 투자의 중점을 선진국으로 돌렸고 일본의 투자 중점은 선진국 이외에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신흥공업국이며 대외 직접 투자도 확실하게 증가되고 있다.⁷⁾

2. 외국 간접 투자

간접투자는 증권 투자라고도 하는데 한 나라의 투자자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채권이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다른 나라 금융 기관에 중·장기 대부를 하는 일이다.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의 최대 구분은 직접 투자자는 비투자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나 간접 투자자는 비투자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않고 채권의 이자, 주식의 이자 배당을 받는 것뿐이라는 데 있다. 간접 투자는 투자자로 보면 그 의도가 일정한 수익을 얻는 데 있으며 잉여 자본의 출구를 찾아 국제적 규모로 투자를 분산해서 위험을 덜자는 데 있다. 비투자국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국제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일이 된다.⁸⁾

7) 유희문,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론』 (서울: 진명출판사, 1995), p. 197.

8) 유희문, 위의 글, p. 198.

Ⅲ. 박정희시대와 등소평시대 외자도입의 배경 비교

1. 한국 외자도입의 배경

한국의 발전경로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제발전과 외자도입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였던 원조경제하의 수입대체산업화 시기 (1953-1961년), 두 번째 시기는 강력한 국가개입하에서 산업화전략이 이루어졌던 1960·70년대, 그리고 1980년 이후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의 경제자유화 시기이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자본축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수요가 국내저축을 초과함에 따라 외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⁹⁾

전쟁 이후 한국경제는 악성순환으로 진입하였는데, 저수입 → 저저축 → 저투자 → 저생산 → 저소득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화의 가속도발전 및 실업의 가일층 증가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갔다.¹⁰⁾

1945년8월 광복된 이래 한국인의 공동의 꿈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부강하고 새로운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과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토가 분단된 민족이 근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은 가시밭길이나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은 공장이라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나 하는 것으로 알아왔다. 개화가 된 후 일본사람이 들어와서 공장을 지었으나, 한국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분야였다. 공장다운 공장은 방직공장 몇개, 고무신공장이 몇개 있을 정도였다. 해방 후 이들은 공장을 불하받아 태동하기 시작하였으나 큰 공장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였다. 6.25전쟁후 제분·제당공장과 면방공장, 모방공장이 건설되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2개(동양시멘트, 문경시멘트)와 판유리 공장이 민간에서 건설된 신식 대규모공장의 전부였다.

1960년대부터 차관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9) 조수현, "한국정책연구,"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과 외자도입정책을 중심으로』 제9권 제2호(2009), pp. 161-188

10) 김관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연구총서, 2008), p. 38.

세가지를 들고 있다. 미국 대외원조정책의 변화, 조국근대화의 가치를 내건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이를 위한 투자자원으로서의 내장동원 실패 등 세 가지가 그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관에 의한 경제개발의 투자재원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치, 사회의 혼란과 미국의 대한 원조 도입에의 축소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착수됨으로써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경제개발이 시작되었던 초기단계에서는 대내적으로는4.19및5.16등으로 정치·사회가 혼란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국내자본축적의 부족으로 공업화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 산업생산이 부진한 상태에서 민간소비생활의 영위를 위한 생필품까지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외자 부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집권자들은 투자재원 확보를 통한 경제개발계획을 계획했으며, 이를 통한 경제성장, 빈곤극복을 이룩하여 사회의 안정을 실현하고 통치세력의 권력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의 해결의 초점은 바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경제를 리드해온 미국경제가 이상의 세계사적 과제로서의 남북문제에 대해 홀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갈수록 더 많은 대외원조가 요구되는 실정이지만, 미국은 한편으로는 (구)소련과의 동서문제에 대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에 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원조를 더 이상 베풀 여력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원조정책 전환의 또 하나의 원인은) 미국의 원조에 대한 수원국들의 비판이다. 종래의 미국 원조는 한마디로 말하여 원조받는 나라들의 위기타개, 즉 정치적 목적달성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원조는 정치적 혼란의 수습이라든가 경제파탄의 저지라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수원국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켰을 뿐이다. 또한 자립경제의 달성이 후진제국의 절실한 요청으로 해결됨에 따라 미국의 대외원조

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들에서 뿐만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높아졌던 것이다. 11)

미국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처코자 하였는가, 무엇보다도 미국은 악화된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고, 그를 위해서는 국제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 받아 온 대외원조를 가능한 한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로는, 원조의 규모 감축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와 같은 무상원조를 유상의 차관베이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고, 셋째로는,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 혼자 감당해온 원조(이는 주로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이지만)를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였다. 이상 세 가지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기초 전환은 한국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은 두말할 것 없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원조정책 전환이 당시의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첫째의 원조규모 감축문제부터 보면, 1950년대 말 미국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미국의 대외원조 삭감은 한국에 대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1958년의 미국 국제수지위기와 그 뒤를 이어 후르시쇼프, 케네디의 등장으로 시작된 동서해빙 그리고 그 동안의 대한 경제원조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 등은 1959년 이후 한국에 대한 외국의 무상원조를 격감시켰다. 위선UNKRA원조는 1960년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으며, CRIK원조도 이미 1956년에 끝이 났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원조이었던AID원조도 1957년을 피크로 급격히 감소되어 1961년에는 1억 달러대로, 1964년 이후에는 1억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한편1956년부터 시작된PL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는1963년에는96.8백만 달러로 거의 1억달러 수준에 가까워졌으나 그 이후에는 격감되어 1966년에는 5천만 달러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9-66년 사이에는 총 1,499.6백만 달러의 원조가 투입되었는데 연평균규모는187.5백만 달러로서 1955-58년 수준의 3분의2정도, 1인당 연평균액으로는 7달러대로 줄어들었고GNP에 대한 비율도 7.3%에 불과하였으며 수입에 대한 비율도 42.6%로 떨어졌다¹²⁾. 원조규모의 감축과 더불어 미국은 원조자금으로 구입하는 물자에 대해서도 그것을 반드시 미국산물자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바

11) 강행우, 『한국경제론』(서울: 도서출판, 1988), p. 47.

12) 임종철, 『한국경제연구』(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1999), p. 139.

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요하였다. 그와 함께, 원조물자를 수송하는 선박도 반드시 미국 국적의 배를 이용토록 하는 '십 아메리칸 정책'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정책은 모두 미국 스스로의 상품수출과 용역수입의 증대를 통한 달러 가치의 유지, 나아가 그를 통한 미국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둘째의 무상원조의 유상베이스 차관으로의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은 1958년에 대외원조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 속에 '개발 차관기금'을 설치하고 종래의 무상원조를 가능한 DLF차관으로 전환코자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대한 원조가운데서 먼저 시설재 원조를 이 DLF차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³⁾ 미국은 무상원조의 규모삭감만이 아니라 이처럼 무상 증여 방식의 원조를 유상의 차관방식으로 전환하는 길을 통하여 그만큼 달러의 해외 유출을 줄이고자 하였던 것이다.¹⁴⁾

셋째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나 경제협력을 서방 선진국과 분담코자 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웃 일본과의 분담이 미국으로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이였다. 이에 미국은 일찍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한·일간에 국교 재개를 위한 와담을 주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물론 경제적 목적보다도 당시 한·일 양국간에 과거 식민지 관계의 청산과 함께 국교를 정상화해야 할 정치적 목적이 더욱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노선으로 회담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가 1965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와서 비로소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계기로 '청구권자금' -일본측에서는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함-이란 이름으로 일본자본이 1945년 철수한 지 만 20년만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한일외담백서, 1965:153-164)

그렇다면 이상의 세 가지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당시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정부는 지금까지의 경제운용방식을

13) 1959년 1월 동양시멘트(주)의 시설확장을 위한 2,140만 달러를 DLF차관으로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체신부의 통신시설자금, 동양화학(주)의 소다공장 건설자금, 중주수력발전소 건설자금 등은 모두 DLF차관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14) 이대근,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사』 (서울: 나남출판, 2005), p. 183.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자 하였다. 경제운영방식은 정부가 가급적 경제에 개입하지 않고 경제운용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그러한 식이었다. 사실 소비재 중심의 원조경제하에서는 굳이 경제의 계획화가 필요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원조의 감축과 또한 무상원조의 차관으로의 전환은 그러한 경제운영방식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게 만들었다.

유상차관의 경우는 그 대부분이 시설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처음부터 공장건설을 전제로 한 것일뿐더러, 또한 나중에 차관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미리 그 상환대전을 비축해야만 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계획적 운영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장건설계획과 원리금의 상환계획이라는 두가지 요구조건 이야말로 지난50년대와 같은 자유방임의 경제운영방식으로부터 새로운 계획적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한 결정적인 국제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¹⁵⁾

한국정부가 1958년 당시 일찍이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경제가 나아갈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또한 계획추진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될 외국차관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외자관리법’의 제정과 ‘외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키 위한 일차적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이대근 2002:460-464) 이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1960년 초에 1960-62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 ‘경제개발3개년 계획’을 완성하였다. 그 계획은 우선 (1)식량의 자급, (2)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3)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증대, (4)소비조절을 통한 민간자본 축적, (5)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산업구조 근대화 등의5가지 계획목표 아래 연평균5.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부흥부의 3개년계획은 1960년4.19항쟁 결과로 이승만 정부의 붕괴와 함께 폐기되었다가 나중에 장면 정부하에서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탈바꿈되고, 다시5.16군사정권하에서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수정, 보완되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계획경제로의 이행이 이상과 같은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와 그에 따른 미국 원조정책의 전환이라는 관점으로만 설명될

15) 이대근, 위의 글, p. 184

수는 없는 일이다. 16)

박정희는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국내자본 조달에 실패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경제정책이 ‘외자’ 도입으로 선호하게 되었다. 17)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내세웠으며 18) 베트남 파병과 한일회담을 통한 외화벌이와 외자도입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 자본주의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투자를 축소하고 사인자본의 작용을 확대한다. 둘째,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내포적 공업화전략을 포기하며 수출주도형 공업화전략을 선택한다. 셋째, 수입과 외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시장의 부분적 자유화를 실시하며 외채에 의거하여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해결한다. 19)

2. 중국 외자도입의 배경

덩샤오핑과 그 이후의 중국정부는 중국을 세계경제에 통합시키는 외향적 개발전략을 구사하는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건국 이후 지속되던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폐쇄경제정책의 중요한 변화였다. 그러면 중국이 그와 같은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배경은 내·외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은 정치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해온 덩샤오핑이 집권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경제발전이었다. 그리고 중국경제 낙후원인은 제1차적으로 과거 체제의 경직성과 정부정책의 실패 내지 과오였다. 모든 사회주의 경제체

16) 이대근, 위의 글, p. 185.

17) 심주형 (2005), p. 5.

18) 실제로, 박정희는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다, 대일굴욕외교에 대한 민중의 반발과 시위, 폭압적인 정치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재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개발 때문이었다, 보릿고개를 겪으며, 가난한 삶을 살던 국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독재정치보다 중요하였다,

19) 손호철,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서울: 이매진출판사, 2006), p. 145.

제가 그러하였듯이 중국경제도 민간부문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인 1950-1977년의 기간에 중국의 공업 총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 성장률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²⁰⁾ 그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 때문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생산의 효율성보다는 투입물의 가치에 의해서 산출물의 가치를 산출한 계획경제 회계방식이었다.²¹⁾ 그에 따라 각 공장의 실적이 평가되었기 때문에 공장들은 무조건 투입물의 양을 늘리는 데 급급하였다. 이와 같이 중간재의 낭비만을 초래한 경직된 계획경제정책의 과오와 통계적 착오는 중국경제의 모순을 가중시켰다.

또한 그 위에 중국의 산업기술수준도 매우 낮았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서 덩샤오핑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²²⁾ 중국의 낮은 산업기술수준은 당연히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 10년간 식량으로 환산된 1인당 농업 노동생산성은 농업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0%인 미국이 연평균 7만 킬로그램 이상인 데 비해 농촌인구가 8억 이상이 되는 중국은 겨우 1천 킬로그램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중국의 농업기술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았다.²³⁾

중국의 1970년대 말 공업기술 역시 선진국의 1940-195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공업노동생산성 역시 매우 낮았다. 예컨대, 그 당시 중국 철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옛 소련, 미국 및 일본 세 나라의 철강업과 탄광업 두 부문 모두에서 중국의 노동생산성과 노동자의 소득은 세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은 산업기술 수준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기법의 수준도

20) Zhang Zhuoyuan, "China's Economy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Lin Wei and Arnold Chao eds, *China's Economic Reform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2), p.17.

21) 중국의 국민소득계정 항목인 농업총산치와공업총산치에는중간생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22) 鄧小平, 『鄧小平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 88.

23) 羅元錚, 『世界經濟與中國』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3), pp. 267-268.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체제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능률적 제도의 바탕 위에서 투입될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자본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중국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중국은 1953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래로 경제적 후진성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키시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로 표현되는 장기발전계획이다. 이 계획은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이들은 4개 현대화 건설을 위하여 1973년부터 1977년까지 5년간 미국, 일본 및 서유럽으로부터 43억 달러에 상당하는 기술과 산업설비의 도입하는 이른바 “43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4개 현대화 계획은 1975년 1월 13일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에서 저우언라이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마오쩌둥의 “국민경제발전 2단계 구상”²⁴⁾으로 정식 발의되었다. 이 구상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전제로 하였다. 그 1단계 목표는 1990년까지 비교적 완전한 공업 및 국민경제구조의 정비이며, 2단계 목표는 2000년까지 4개 현대화의 완성이었다.

이 계획은 1982년 9월 제12기 중국공산당 대회의 결정으로 새 리더십 체제에서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²⁵⁾. 이 결정에서 각 단계별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즉, 중국의 GNP를 198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90년에 1980년의 2배, 2000년에 1990년의 2배로 증가시키며, 21세기 중엽에는 그것을 2조 8천억 위엔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²⁶⁾ GNP와 마찬가지로 무역규모도 2000년까지 두 번의 배증으로 총 교역액이 1990년에 830억 달러, 그리고 2000년에는 1,600억 달러에 달하도록 계획되었다.²⁷⁾

24) 중국어로 “國民經濟的發展可以按兩步來設想” 이라고 한다

25) Liu Guoguang, Liang Wensen and Others, *China's Economy in 2000* (Beijing: New World Press, 1987), p. 37.

26) 이러한 목표는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즉, 1980년=100으로 한 중국의 GNP 지수는 1987년에 201.8로 1990년의 목표가 3년 앞당겨졌고, 2000년의 목표는 5년이나 앞선 1995년(지수=421.6)에 달성되었다. 1999년의 GDP는 경상가격으로 8조 2,054억 위엔(약 1조 달러)에 달하였다.

27) 胡征慶, 『中國對外開放政策』 (成都: 成都科技大學出版社, 1989), p. 11.

중국이 장기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²⁸⁾. 그런 막대한 주자재원의 공급원으로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눈을 돌렸다. 이것은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 목표의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국지도층의 공통된 인식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 배경은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하게 된 데는 그때의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 정세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중국의 안보상황은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팽창주의로 인하여 크게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중시했던 제3세계와의 연대는 큰 힘이 되지 못하였다. 제3세계는 중국의 안보나 경제발전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반식민주의, 비동맹 중립주의 이념도 퇴색하였다²⁹⁾.

1970년대에 중국과 소련의 갈등관계가 깊어진 상황에서 소련의 움직임은 중국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1978년에 소련은 베트남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캄보디아 침공을 지원하는가 하면 1979년에는 직접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는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세력을 중국은 필요로 하였다.

과거에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연합세력은 제3세계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제3세계는 더 이상 중·소 대립에서 중국의 지원군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가장 적합한 연합의 대상으로서 미국과 일본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일본은 이미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상태였고,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패배한 뒤에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연대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은 구태여 대외개방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및 일본과 반소노선을 구축할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소련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비증강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고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미·일 안보조약을 바탕으로 하여 유지

28) 1978년2월26일 당시 국무원총리 화궈펑은 정부업무보고에서4개 현대화의1978-1985년 소요 투자액이 과거28년간의 공업투자액과 맞먹는다고했고, 부총리 리셴넨은 1978년9월19일 일본 방문중교토통신과의 회담에서 그 규모가 약6천억 달러라고 하였다. Richard Baum, *China's Four Modernizations: The New Technological Revolution*(Boulder, Colo.: Westview Press,1980), p. 5.

29)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서울: 나남출판, 2004), pp. 100-102.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일이 서로 체제를 달리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대외적 폐쇄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은 대미·대일 관계를 더 이상 확대시킬 수 없게 하는 요인이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및 일본과 외교 안보적 유대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중국은 미·일과의 외교 안보적 유대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두 나라의 경제적 지원이 절대로 필요하였기 때문이다³⁰⁾.

중국이 미·일과의 관계를 확대함에 따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중국과 직접적인 경제교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한국과 타이완도 포함되었다. 그 동안 중국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주로 홍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중국은 대외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와 직접교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1990년부터 중국에는 세계각국의 투자자본과 기술이 유입·확장되었다. 중국은 1999년 1년 동안 세계 187개국과 합작계약을 맺었다. 1978년에는 한 나라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100개국을 초과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999년에 연간 404억 달러로 1990년 35억 달러에 비해 약 11.5배나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데³¹⁾,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투자국층의 천부적 요소의 변화이다. 특히 노동력이 부족하고 비싸지면 노동력이 풍부하고 값싼 중국에 공장을 이전시키려고 한다. 즉 이는 저임금을 추구하는 FDI이다. 둘째는 중국의 거대한 국내시장을 찾아, 그리고 중국이 만들어 놓은 각종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진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수입제한이 없어도 기업이 중국시장에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중국에 진출할 것이다. 즉 시장기대에 기초한 FDI이다. 셋째는 중국에 풍부한 원료가 있을 때 원료 수입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중국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이다. 넷째, 이상의 원인과 더불어 중국이 자국보다 세계 등의 측면에서 좋은 조건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이전시키는 것은 비용절약이 된다. 각종 기업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이상 네 가지 요인 중에 중국에 대한 FDI의 주요 요인은 저임

30) 오용석, 위의 글, p. 102.

31) 와나카기요시, 정후식 역, 『13억 중국시장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2002), p. 118.

금과 시장기대인 듯하다³²⁾.

IV. 박정희시대와 등소평시대의 외자도입의방식 및 전개 비교

1. 한국 외자도입의 방식과 전개

(1) 한국 외자도입의 방식

1960-83년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도입기다. 외국인직접투자는 1962년부터 허용되어 그해 미국 켐텍스(Chemtax)사가 한국 나이롱의 필라멘트 나이롱사 사업에 57만9천달러의 자본을 출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외자도입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차관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 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하였다. 특히 1973년에는 ‘외국인투자 비율조정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여 외국기업의 소유자본이 100%에 이르는 직접투자보다는 합작투자를 장려하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 차관을 선호했던 것은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배가 우려되는데다 차관에 의한 자금조달이 국내 자금흐름을 통제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개도국의 외채위기가 중대 문제로 대두되자, 차관 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³³⁾.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문턱에서 박정희정권은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선택의 미세한 차이가 아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로선택’은 이 시기가 제일 관건이었다. 통화개혁이 실패한 후 박정희정권은 수출주도의 공업화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처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자본주의 진영과 더욱

32) 나카가네카츠지,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출판, 2001), p. 362.

33)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대외경제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76.

밀착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으로 하여금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진입할 필요성을 제 때에 인식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원조가 부단히 감소하고 있었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자본금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는 냉혹한 현실은 한국정부의 시선을 일찌감치 수출에 돌리게 하였다. 외부의존형 성장 전략은 자본 기근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책으로 선택된 것이지만, 원리금 상환의 부담은 외화획득이 가능한 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정책방향을 규정하였다³⁴⁾. 만약 계속해서 수입대체정책을 기조로 했다면 경제개발계획은 외환 부족으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의 문제는 박정희로 하여금 수출 주도전략을 실시할 절박성을 인식하게 했다³⁵⁾.

1 한일 외교관계 정상화

한국이 경제개발계획을 급속히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외자의 도입이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경제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일본의 발전자금 기술과 시장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은 날로 강렬하여져 한일회담은 박정희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박정희정부의 원래 목표는 4.26억 달러의 외자 도입이었다³⁶⁾. 그러나 1964년 말까지 도입한 외자는 목표의30%에 불과하였다. 당시 동서냉전 국면에서 한국의 가장 현실적인 외자 도입원은 일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이길(한인 관계 정상화)밖에 없다. 굴욕적인 면이 있더라도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들은 대대로 외국들에게 더욱 큰 굴욕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다³⁷⁾.”

『사상계』 1960년 11월호는 「한국 일본이 손잡을 필요성」이라는 글을 실어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경제와 손을 잡는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기업계도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가져올 자금을 중시하였기에 한·일 외교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지지했다³⁸⁾.

34)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출판사, 2008), pp. 118-119.

35) 조예제, 카터에 커트 편지, 『한국 근대화기적의 과정』 (서울: 월간조선사, 2005), p. 220.

36) 합동통신사, 편집부 저, 『합동년감』 (서울: 합동통신사, 1959), pp. 42-44.

37)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서울: 조선일보사, 2001), p. 47.

38)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p. 136.

정상회담 기간에 박정희는 미국정부에게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에 필요한 23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케네디는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렬히 권고했다³⁹⁾. 미국의 지원거절과 압력은 박정희정부로 하여금 한일관계 정상화에 매달리도록 만들었다. 재산청구권문제에서 한일 쌍방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일본 외무성은 최고로 5-6천만 달러를 배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일본 대장성은 한국의 손실이 1-2천만 달러밖에 안되기에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한국의 요구보다 적다고 판단했다. 1962년 11월의 김종필과 오히라회담은 대일 청구권문제에서 원칙상의 일치를 달성하였다. 김-오히라 메모가 기록한 구체적 숫자는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상업대부금 1억 달러였다⁴⁰⁾. 이는 쌍무회담기간에 취득한 가장 실질적인 지전이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간 자체가 제일 큰 가치였기에 시간을 오래 끌수록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장애도 더욱 뚜렷하였다. 미국의 압력이 없어도 하더라도 한국은 부득불 빨리 일본의 지원을 얻어야 했다.

많은 우여곡절과 간난신고 끝에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1965년6월에 끝내 실현되어 박정희의 발전모델이 정식으로 궤도에 오르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객관적으로 말하여 한국은 협의의 달성을 더욱 절박하게 희망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국 이외의 다른 받침대를 얻으려고 하였다. 계속 과거에만 매달린다면 발전의 시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통계에 의하면 1965년의 관계 정상화로부터 1973년까지 일본은 한국에 상업대부금 6.74억 달러와 공공대부금 4.16억 달러를 제공하였다⁴¹⁾.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액은 1971년에는 4200만 달러로써 한국 외자총액의 35.4%를 차지하였고, 1979년에는 5.9억 달러로 외자총액의 59.8%를 차지하였다⁴²⁾. 일본은 미국을 대체하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국대부금의 주요 내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과 대외무역의 중요한 상대가 되었다⁴³⁾.

39) 리영희, 임현영, 『대화』 (서울: 한길사, 2005), p. 277.

40) 유병용, “박정희정부와한일협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1999), p. 34.

41) 임효, 『한국경제발전의 정치 분석』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1995), p. 24.

42) 좌승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 새로운 발전모형과 공정사회』 제4권제1호 (2011), p. 63.

43)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p. 143.

한일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후 일본은 자금공급원의 역할을 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자금공급원으로 미국을 상품판매의 주요시장으로 하는 한국-미국-일본의 경제성장 트라이앵글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경제의 도약을 위하여 중요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일으킨 자금공급자의 역할과 미국이 일으킨 제품 흡수자의 역할이 없더라면 한국의 회향형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 베트남전쟁 ‘특수’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것은 한미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다. 1961년 11월에 박정희가 케네디와 회담을 할 때 “만약 미국이 지원을 제공할 것을 승인하면 한국은 파병할 수 있다”고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는 처음부터 베트남과 병으로 발생할 경제이익에 관심을 두었다. 1962년 2월에 김종필은 베트남을 방문하고 파병의향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주미 한국대사 김현철도 여러 차례 미국에 파병결심을 전달했다⁴⁴⁾.

베트남전쟁문제를 둘러싸고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있었으므로 존슨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며 베트남전쟁이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존슨은 동맹국의 수뇌들에게 20여통의 친서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모두 모르는 척 하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응부하거나 혹은 아예 참전을 거절했다. 오직 한국만이 대량의 병력을 출동시켰다. 박정희는 파병을 동의함과 동시에, 이는 다만 그 개인의 소원이고 최후의 결정은 국회에서 내릴 일이라고 함으로써 대가를 얻기 위하여 외교적 제스처를 썼다.

존슨도 상응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응낙하였다.

① 주한미군을 계속남기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 ② 한국의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매년 군사원조항목을 한 차례 조정한다. ③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정책이 기본상 변화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한국에 대하여 1.5억달

44) 김광희, 위의 글, p. 145.

러의 발전대부금을 추가한다. 다음 날 맥나마라오 회담 할때 박정희는 베트남파병 한국 사병들의 대우를 높이는 문제를 진일보 협상하였다⁴⁵⁾.

1966년에 주한 미국대사와 한국외교부장관 이동원은 한국에 아주 유리한 비밀조약을 체결하였다. 그중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경제이익에 관한 보장은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모든 군수물자와 베트남군의 부분적인 군수물자는 모두 한국에서 제공하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② 미국이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하여 한국의 수출능력을 증강한다. ③ 하루 속히 1,5억 달러의 대부금을 제공하고 또 계속하여 대부금을 제공한다. ④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을 미국이 장려한다⁴⁶⁾.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 베트남전쟁은 한국의 근대화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어 1960년대 한국경제발전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경제도약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⁴⁷⁾.

3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박정희정부는 시장을 대신해 유망한 기업가들을 선별하고 이들을 지원하였다. 정부 개발정책의 핵심은 유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현대적 제조업을 건설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수출을 위해 무역, 재정, 금융, 관세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신장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특히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공업 및 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 외국기술의 습득 등을 도모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 설비,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지원 등을 일관적으로 제공하였다⁴⁸⁾.

정부는 수출을 촉진시키려고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 수출소득세를 50%면제해주었으며 영업세를 완전히 없앴다. 또 수출용 자재를 수입할 때는 용자를 해줬고 돈이 모자란 기업에게는 수출산업기금을 만들어 돈을 대주

45) 김광희, 위의 글, p. 147.

46) 박근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베트남전쟁』, (도쿄: 어차의 책방, 1993), pp. 17-18.

47) 홍규덕, 『1960년대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1999), pp. 76-77.

48)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한국근현대사』 (서울: 서해문집, 2004), p. 351.

었다.

박대통령은 부정축재 처리 과정에서 대자본이 가지고 있던 은행주식을 모수하고 1962년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정책의 최종 권한을 행정부로 귀속시켜 자본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화폐자본을 직접 통제했다. 또한 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과 같은 특수 목적의 은행을 설립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관할하도록 하였다⁴⁹⁾. 이러한 은행은 특정 기업에 낮은 이자로 장기 대부해 주었다. 이정책은 1960년대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의 권유를 받아들여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려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했다.

박정희정권은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에관한임시특례법’(1970.1), ‘외국기업 노사분규에 대한 임시특례법’(197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12) 등의 노동악법을 만들어 국내외 자본을 보호하며 노동운동을 규제하였다. 1973-74년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완전히 개정하여 산업별 체계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정의권을 제한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면서 저임금 기반을 다져갔다.

1970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만들어 마산과 이리(지금의 익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1973년에는 ‘외자도입법’을 고쳐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금과 노사관계에서 여러 우대조치를 마련하였다. 외부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즉 남의 돈으로 외형을 키워온 기업들이 1960년대 말 경기불황으로 어려워지자, 기업이 빌린 사채를 신고하도록 한다음, 이를 5년 동안 나누어 내게 하였다. 이자율도 원1.35%로 크게 낮추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8.3조치(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15호)로 기업들은 사채 3.5000억 원의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을 오랫동안 미룰 수 있는 금융특혜를 누렸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단기고리대출금을 장기저리대출금으로 바꾸어 빌리게 되었고 장기저리의 산업합리화자금도 쓸 수 있었으며 갖가지 조세를 감면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같은 특혜 덕분에 사채로 어려움을 겪던 독점대기업은 다시 한 번 자본축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자본축적의 위기를 넘

49) 정시구,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행정사학지, 2005), p. 19.

긴 박대통령은 이들을 중화학공업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⁵⁰⁾.

정부는 1973년1월 중화학 공업화를 선언하면서 그해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금융·조세에서 특혜와 지원을 약속하여 독점자본이 참여하게끔 만들면서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73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⁵¹⁾을 제정하였으며, 1974년 ‘국민투자기금법’을 마련하여 1974-81년 동안 기금 가운데 86%를 중화학공업 부문에 지원했고 14개 주요 산업에 처음 3년 동안 100%, 다음 2년동안 50%의 내국세 감면혜택을 주었다.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소득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⁵²⁾.

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베트남 파병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고 동시에 여러장치를 마련하였다.

(2) 한국 외자도입의 전개

1965년 한·일 국교재개를 일대 전기로 하여 외국자본은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한다. 공공차관의 경우, 1959-64년간의 누계가 겨우1억1천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1965년7천7백만 달러, 1966년1억5천4백만 달러, 1969년2억3천3백만 달러 등으로 급증되었고, 상업차관에서도1962-64년간의 합계 1억2천만 달러가 1965년7천8백만 달러, 1966년1억5백만 달러, 1969년 6억2천3백만 달러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5개년 계획도 당초 계획치를 초과하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은1950년대까지 국가자본에 의한 무상원조가 대량으로 도입된 다음, 1960년대 초부터 재정차관으로 바뀌었다. 반드시 계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60년대 후반부터 상업차관 형태가 도입의 자를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자본의 유입과정을 보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50)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서울: 서해문집, 2004), pp. 377-379.

51) 여천(석유화학), 옥포(조선), 온산(비철금속), 창원(기계)에 산업별 공업단지를 만들고, 기존의 구미(전자), 포항(철강) 등지도 새로 개발했다.

52) 기업에 주는 여러 특혜로 인해 국민의 조세 부담은 1973년12.6%에서 1981년18.2%로 늘어났다.

①제1시기(1959~65): 1959년1월 최초로 동양시멘트 시설확장을 위하여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으로부터 214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차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1965년6월 한·일간의 국교가 재개될 때까지의, 이른바 외자도입을 위한 제도정비기이다.

이 시기의 차관은 전체적으로는 재정차관과 미국의 무상증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별 투자구성을 보면 재정차관의 경우는 7:3 정도로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제조업으로 갈라지는데, 이중 제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은 전력을 비롯하여 운수 및 보관, 통신, 상·하수도 건설자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상업차관은 거꾸로 7:3 정도로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주로 전력과 운수로 갈라지는데 다시 제조업의 내부구성은 화학섬유, 화학비료, 시멘트의 3대업종이 구축을 이루었다. 그밖에 정유, 철강, 제재, 제지등의 업종이 큰 몫을 차지하여 이때부터 이른바 수입대체적 공업화의 성격을 강력히 나타냈다.

②제2시기(1966~72): 일본의 대외자본수출의 요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역할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요구가 합쳐져서 무리하게 타결된 한일회담에 의해 일본 청구권 자금이 유·무상 합쳐져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그와 함께 일본 상업차관을 비롯하여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등으로부터의 상업차관이 극히 왕성하게 들어온 시기이다. 한마디로 이시기는 상업차관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일본의 독점자본은 물밀듯이 한국으로 밀려들기 시작한다, 일본의 자본도입이 합법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다른 나라부터의 자본도입도 자유롭게 보장된 셈이었다. 따라서 한·일 국교재개는 한국 경제개발 방식을 외향적 개발전략으로 완전히 굳히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 주었고, 한국경제를 금융식 또는 국제 분업적 조건에서 새로운 양태로 세계자본주의에 편입시키는 전제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마구 유입된 일본의 자본들은 특히 화학섬유, 합성수지, 기타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일본 내에서는 시설과잉 내지 노후상태에 빠진 시설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일본의 자본을 끌어들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1960년대 말이 되자 이미 부실상태에 빠져 차관원리금 까지도 보증은행으로 하여금 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으로 몰려갔다.

1960년대 말에 나타난 기업 부실화→경제불황은 물론 일본 상업차관 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50년대 말의 불황에 이어 두 번째로 맞는 외자의 존경제의 구조적 모순의 표출이었다. 정부는 이 부실기업에 대하여 정부 내에 특별대책기구까지 만들어 금융지원의 중단, 기업의 통폐합 등 강력한 수단으로 대처하는 한편, 외자도입의 형태를 직접적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코자 노력하게 된다.

<표1>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차관도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1959-66		1967-71		1972-76		1977-83		누계		
	공공	상업	공공	상업	공공	상업	공공	상업	공공	상업	계
미국	68	41	494	471	718	1,046	1,963	1,569	3,243	3,127	6,370
일본	17	68	184	321	429	432	830	1,700	1,460	2,620	4,080
합계	85	109	678	792	1,147	1,478	2,793	3,368	4,703	5,747	10,450

③제3시기(1973~79): 차관원리금의 상환압박에 부딪치자 정부는 두 가지 정책대안으로 타기를 시도했다. 하나는 차관을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의 강화를 통한 원리금 상환 능력의 확대였다.

우선 정부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두 개의 중요한 법령을 제정한다.

마산, 이리 등 수출자유지역을 설정하여 그 속에서 외국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보장하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0)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조활동을 규제시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1970) 의 제정이 그것이다. 이와함께 수출의 강화를 위해서 저임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사실상 모든 노동운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1972년에는 ‘유신체제’ 를 출범 시킴으로써 제도적인 완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게 된다.

1970년대 들어 증가 추세에 있던 직접투자는 1973년의 오일쇼크를 거치고 1975년의 베트남전쟁의 종결로 주춤하기 시작했다. 대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재정차관이 늘고 상업차관의 경우에도 종래 개별 민간기업 베이스에서의 자본재 도입계약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 곧 은행 혼이나 외화표시 채권 발행 등과 같은 금융차입 방식으로 전환하였

다⁵³⁾.

<표2>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인가상황(1973.8.31) (단위: 천만 달러)

연도별 국별	1962-70		1971		1972		1973(1-8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79	111,981	11	22,536	19	32,340	9	4,443	118	171,300
일본	108	40,748	82	24,956	155	78,028	190	196,829	535	340,570
서독	4	2,335	1	2,516	3	3,800	-	-	8	8,651
기타	20	19,981	3	1,980	5	2,198	4	5,100	31	29,259
계	211	175,045	96	51,997	182	116,366	203	206,372	692	540,780

2. 중국 외자도입의 방식과 전개

(1): 중국 외자도입의 방식

1950년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74억루블(약 19억달러)을 차관으로 들여왔으나 그후 쌍방관계가 악화되어 차관을 중단했다. 1965년부터 중국이 소련의 차관을 상환 완료한 1978년까지 중국은 외채를 빌리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1978년 말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국제자금시장으로부터 자금과 선진생산관리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로부터의 자금도입에 의한 간접투자이다.

1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여기에는 합자경영, 합작경영, 독자경영(이상을 ‘삼자기업’이라 칭함)을 통한 자원합작개발, 보상무역, 수출가공과 조립·임대 등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승인한 ‘삼자기업’은 1만2천여개(현재 개업한 것은 4천여개)이고 외국회사와 해양석유개발탐사를 위한 계약체결이 44개이다. 외국기업은 이미 실제로 1백억달러를 투자하였고 이외 ‘三來一補⁵⁴⁾’ ‘을통해, 또는 국제임

53) 이대근,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서울: 창작사, 1987), pp. 176-180.

54) 三來一補란 원료를 가져와 가공하고(來料加工), 원료를 가져와 조립하고(來料裝配), 견본을 가져와 주문하고(來樣訂貨), 물물로 무역한다(補償貿易)는 것을 말한다.

대와 기타 방식을 통한 외자유치가 22억달러이다. 중국은 자금부족으로 대규모 경제건설을 담당할 능력이 없어 외국기업의 자금과 선진기술을 도입, 대륙내의 에너지와 교통분야의 개발과 낡은기업의 기술개조를 기도하고 있다.

2 해외로부터의 자금도입에 의한 간접투자

외국정부·민간은행·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중장기 차관과 국제시장에서의 채권 발행 등이 포함된다. 1979년부터 1988년상반기까지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기채한 액수는 2백92억달러이고, 그 중 외국정부로부터의 차관이 1백9억7천만달러,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관이 88억달러,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발행한 채권이34억달러이며, 나머지는 외국은행으로부터의 상업 신용대출, 수출신용대금 등이다.

①외국정부차관: 외국정부로부터의 차관은 이율이 비교적 낮고, 상환기간도 길며 액수도 커서 대형 경제건설항목을 위한 믿을만한 자금보장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제공될 수 있는 차관은 중국으로서는 대외차관의 주요원천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9년 중국이 돈은 급히 필요하고 외자도입은 모색단계에 있을 때 일본정부는 3천억엔의 저리차관을 제공하여 京秦(北京-秦皇島) 철도, 亮石(亮州-石臼所) 철도, 衡廣철도, 秦皇島항구, 石臼所 항구와 五強溪發電所 등 6개 항목을 건설하였다.

중국 경제무역부 외국차관관리국 통계에 의하면 1977년부터 1988년 5월까지 중국이 19개 국가의 정부로부터 승인된 차관의 누계액은 1백9억달러이고, 이중 계약이 체결된 금액은72달러,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50억달러로, 매년 평균 5억달러 이상의 외국정부차관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중국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매년 외국정부차관을7-8억달러로 증가시키려 하고 있고, 이는 지난날에 비해50%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그간 중국에 정부차관을 제공한 국가로는 일본, 벨기에, 덴마크, 쿠웨이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호주, 서독, 스페인,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 등이다.

② 국제금융기구 차관: 중국은1980년5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중국 대표권을 회복한 후 이들 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 두 조직을 주요 차관 제공원으로 삼았고, 1986년3월에는 다시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여 차관의 길을 하나 더 넓혔다.

국제통화기금은 1981년 중국에 3억3천4백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고, 1986년 11월 다시 7억1천7백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여 중국의 수입물자대금 지불에 사용케 했다.

세계은행의 중국에 대한 차관액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1988년 상반기까지 세계은행이 승인한 차관액은 72억달러이고, 그중 이자가 지불되는 硬性(경성)차관이 44억달러로 61%를 차지하고, 이자가 없는 软性(연성) 차관이 28억달러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관은 66개 항목에 사용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차관은 항목의 건설 진도에 따라 지불되므로 비록 72억달러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액은 26억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중국에 대한 차관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1988-1990년간 중국에 1백20억달러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87-1990년간 중국에 16억달러의 경성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차관금액을 87년에 3억달러, 88년에 3억5천만달러, 89년에 4억5천만달러, 90년에 5억달러를 배분했다.

③ 해외 공채발행: 중국은 외국차관 외에도 1982년부터 매년 해외 자금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경제건설의 자금을 조달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중국은행,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福建省投資信託公社(부건성투자신탁공사), 上海市投資信託公社(상하이시투자신탁공사), 天津市投資信託公社(타이진시투자신탁공사) 및 재정부 등 명의로 일본의 도쿄,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싱가포르 및 홍콩 등에서 채권을 발행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의하면 1982~1987년말까지 중국은 해외에서 20여차례의 금융채권을 발행했고, 그 누계는 33억8천만달러에 달해 중국의 실제 외자이용총액의 10.59%를 차지하고, 외국차관 차용총액의 14.8%를 차지한다. 발행채권은 엔화표시 채권이 가장 많아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달러화, 마르크화, 홍콩달러화 등이다.

중국이 대외 개방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투자환경은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며 외자도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더욱이 1992년 봄에 덩소핑이 소위 남순강화를 발표한 이후 외자는 폭발적으로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수단은 주요 경제특구의 개방 과 FDI정책의 실시 등이

있다.

3 특구개방

중국의 대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 개방 지역도 점차 확대되었는데, 경제특구와 연안 개방 도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 특구란 국가가 경제개방의 필요에 따라 해외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 국내법적인 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 개방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특별 경제 구역이다.

경제 특구의 개념, 성격 및 역할이 확정된 것은 1980년 3월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관으로 광저우에서 열린 광둥·부건성 합동 회의에서이다. 회의는 특구의 명칭을 경제 특구로 하고, 특구에 시장 조절 기능을 인정하며 화교 자본과 외자 유치를 기본 임무로 부여하였다.

경제 특구 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덩샤오핑이 말한 “4개의 창구”로 요약되는데, ①선진 기술 도입 창구, ②현대 지식 도입 창구, ③선진 관리 경험 도입 창구, ④대외 개방 정책 창구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 특구의 발전 전략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외화와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내륙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 지향적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보면 특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중앙 정부는 경제 특구의 지방 정부에게 상당 수준의 경제 관리권을 부여한다. ②중앙 정부는 경제 특구 내의 기업에게 지령성 계획을 하달하지 않으며 경제 특구 내의 기업은 충분한 경영자 주권을 가진다. ③중앙 정부는 경제 특구 내의 기업에게 세제 특혜를 부여한다. ④경제 특구 내의 기업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일률적으로 관세, 상품세,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주고 중국산 원자재로 생산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일부 소수 상품을 제외하고 전액 세금을 면제해 준다. ⑤투자자는 투자 협의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 기한의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입찰이나 경매 방식을 통해서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특별 구역에서의 경제 활동은 계획적 지도 위주가 아니라 시장 조절 위주로 한다. ⑦경제 특구 내

에서는 경제 관리, 유통, 기본 건설 관리, 노동 임금 제도 등에서 내지와 구별되는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⁵⁵⁾.

개방정책의 목표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경제교류 강화를 통해 선진기술, 자본, 지식, 관리경험, 경영방식 등의 도입으로 국내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외경제 개방의 공간적·내용적 확대, 대외무역의 급증, 대규모 외자도입에 의한 발전재원과 선진기술의 도입, 인적교류의 증대 등으로 표현되었다⁵⁶⁾.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연해도시를 개방하고, 연해경제개발구를 설치하여 양자강 연안도시와 내륙지역의 청두를 개방한다. 외자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를 환영한다.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외 경제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 장려한다. 대외무역을 확대하여 외화수익을 늘리고, 무역체제를 개혁하여 지방과 기업의 수출을 적극 장려한다. 중국에서 개방의 추진과정은 점개방-선개방-면개방-전방위개방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대외개방 방침이 확립된 이후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는 먼저 하나의 근거지를 설정하고, 1980년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인접한 광둥성과 복건성이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头), 하문(廈門)의 4개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만약 특구의 개방이 성공한다면 전국적인 개방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덩소핑은 이렇게 말하였다, “특구는 개방의 기지로서 경제와 인재양성 측면에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외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덩소핑의 구상에 따라 특구에서는 특수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내륙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 특구의 경제구조는 중외합자, 합작경영, 외상독자기업을 위주로 하고, 그 자본금은 주로 외자에 의존하고 생산품은 주로 수출에 사용한다. 2. 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금, 출입국 등에 있어서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다. 3. 특구에는 내륙과 다른 관리체제를 시행하여 더욱 큰 자율권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특구를 설치한지 4년이 지난 1984년에 덩소핑은 다시 연해지역 14개 항구

55) 조준현,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 관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pp. 121-123.

56) 진홍상, “경희대학교 경제연구”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사회의 변천에 대한 소고』 제17집 (2001. 12), pp. 131-146.

도시를 개방하였다. 그14개 도시는 바로 천진(天津), 상해(上海), 대련(大连), 지황도(秦皇島), 연대(烟台), 청도(靑島), 연운항(连云港), 남통(南通), 영파(宁波), 온주(温州), 복주(福州), 광주(广州), 담강(湛江), 북해(北海)이다. 이 지역들은 특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특구에서와 유사한 특별정책을 시행하였다.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및 시장경제가 활발하여 경제발전 속도가 전국 평균수준보다 빠르다. 이 ‘연해경제 개발구’의 인구는 전국의37.4%를 점하나 국민총생산은 전국의51.2%를 점하고, 전국 1인당 국민총생산은1,714원(206달러)이나, 이 지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2,360원(284달러)가 되며, 이 지역의 공업은 전국의 58.7%, 농업은44,4%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특구의 건설은 중국의 외자도입을 위해서 제일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표3> 중국의 개방 지역과 특징

명칭	지정연대	특징	주요 인센티브
경제특구	1979-80년 4개 도시 지정. 하이난다오는 1988년개방도시에서경제특구로지정, 점개방단계	5개지역으로국한 홍콩, 마카오, 대만의 배후지역에위치	<특구관련법>에 의해 법인세 10-15%
연해개방도시(경제기술개발)	1984년지정 선개방단계	동부연안의14개전통적 무역항도 시내경제 기술개발구설치	법인세 12-30% 경제 기술 개발구는 10-30%
연해경제개발구	1985년지정 면단계개방	주강, 민난, 장강심각 주랴오동반도, 산둥반도 개방구	법인세12-30%
고신기술개발구	1988년14개지정 1997년현재 52개로확대	연해지역 27개, 내륙 지방19개, 변방지역9개등 전국주요도시에 모두지정	1991-93년의<고신기술개발구관련 규정>, <과학기술촉진법>등에 의거법인세15-30%
경제개발구	1980년 중반이후 각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지정 전국에2000여개	지방정부차원의 개발 구역성추진 개발구과열로 중앙정부가 정리하기도 하였음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인센티브 및 지원제도제공 법인세 15-30%
보세구	1990-91년지정	상하이, 푸둥, 톈진, 선전, 파렌, 광저우, 샤문, 푸쩌우, 청다오, 닝보, 산터우, 등특구 및 개방 도시지역에 지정	지정된 보세구역 내에서 수출관련생산, 무역대리, 물류, 금융, 기타 서비스업무를 허용

4 FDI정책 실시

등소평의 대외개방사상의 주요 특징은 첫째가 외자도입이다. 중국의 대외교류 부문에서 가장 현저한 성과를 보인 것 역시 외자도입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에서부터 외자 도입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외국인 투

자는 대외 차관과 달리 외채의 원금 상환 및 금리 부담이 없고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준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고용 확대 효과와 기술 이전 효과가 크고 선진 경영 기법의 도입을 수반한다. 중국이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한 효과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외자 도입을 위한 개혁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외자 도입과 관련된 기구 및 조직 체계의 설립과 정비이다. 적극적인 외자 도입을 위하여 중국 정부는 1979년에는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를, 1981년에는 중국투자은행(BIB)을 각각 설립하고 1982년에는 무역 및 외자 도입에 관한 업무를 대외 경제 무역부로 일원화하였다. 이와함께 국제 금융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1980년4월에는 국제 통화기금(IMF), 같은 해5월에는 세계 은행에 각각 복귀한 데 이어 1986년에는 아시아 개발 은행(ADB)에도 가입하였다.

둘째는 외자도입 관계법제의 정비로서,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经营企业法)」의 제정 이후 1990년까지 500개에 가까운 관련 법규가 제정되었다. 「중외 합자 경영 기업법」은 중국과 외국의 공동 투자에 의한 기업 설립과 경영을 규정하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기본법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서, 여기에는 조세 협정이나 투자 보호 협정과 같은 정부간 협정이 포함된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해 간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적극적인 유인 정책 때문이었다.

중국 외자 도입 정책의 중심이 외국인 투자 유치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중반부터이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에 관련된 법규가 대대적으로 정비된 시기도 바로 1985년과 1986년 이었다. 1979년에 공포된 「중외 합자 경영 기업법」은 중국과 외국의 투자자가 중국에서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할 경우의 투자 형태, 투자 비율, 경영 방식, 송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1982년12월 전국 인민 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 인민 공화국 새 헌법에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허용 조항(18조)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헌법의 보장을 받게 되었다⁵⁷⁾.

1980년대 말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외국인투자에 기인한 것이며⁵⁸⁾, 중국

은 1978년 대외개방이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1992년 덩소핑의 남순강화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경제이념으로 채택하는 등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추세가 더욱 진전되었으며 또한 대외개방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내륙으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덩소핑의 개혁개방정책과 외자의 적극도입을 위해 FDI정책 실시하였다.

① 개혁개방 정책에 있어 FDI정책의 이론적 배경

1남순강화 (南巡讲话)

1992년 말경 덩소핑이 남쪽의 신전(深圳) 주해(珠海) 우한(武汉)등을 돌며 개혁개방정책을 강조한 강화로서 1992년 10월 공산당제14기 전인대에서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 선언하여 시장경제화를 가속화 함으로써 1993년이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원년이 되었다

2선부론(先富论)과 공동부유론(共同富裕论)

경제적 발전의 조건이 허용된 동부 연안지역 (沿海地区)부터 우선 경제발전 도모한 후 전구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는 확대과정을 강조하였고,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된 일이라는 사고가 팽배해지기 시작하였다. (시장경제의 근거, 배경)

3 성자성사론(姓资姓社论) - 흑묘백묘론(黑猫白猫论)

보수파와 개혁파의 논란이 되던 시장경제와 개방정책 시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덩소핑이 강조,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는 ‘이념이 아닌 경제적 수단’임을 강조 표현하였다.

덩소핑의 강한 이니셔티브(主动权)를 위하여 1979년 광둥성의 선진(深圳) 주해(珠海) 샤문(厦门) 선대(汕头) 등4개 도시에 경제특구를 개선하였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우대세제를 적용하고 동 지역에 자주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후1984년부터 1985년에 걸쳐 장강(长江) 주강(珠江) 델타지역(三角洲地区)을 포함한 요동반도(辽东半岛) 산둥반도(山东半岛) 전역을 전면개방, 경제기

57) 조준현.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 관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pp. 103-104.

58) 최백렬. "국제경영리뷰"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8권(1)호(2004), p. 220.

술개발 특별구를 설치하였다(대련, 청도, 상하이 등 14개 도시).

② 과학진흥국(科兴振国)정책

화지계획(火炬计划)의 일환으로 1990년 상하이 푸둥(浦东)지구를 개발구로 지정하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고신(高新) 기술개발구를 53개 지정하였다. 산업의 고도화와 신기술의 산업화를 도모하고자 세제상 우대조치와 인프라의 정비등 첨단기술의 와자도입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실시하였다. 1999년 에는 53개소의 고신(高新)기술개발구에 18000개 사기업과 220만 명의 종사자가 고신기술개발구에 종사하게 되었다. 중국에 직접 투자한 외자계 기업은 2003년 말 46.5만 개로서 2002년 중에도 전년에 신설된 기업의 20.2%에 해당하는 4만 개의 FDI기업이 유치되었다.

③ FDI정책 유지기위해서 위시장환기술(為市場換機)정책

1993년8월 외상투자방향지도 규정으로 해외직접투자업종을 장려업종(奖励业种), 제한업종(限制业种), 금지업종(禁止业种)의 3종류로 구분하였다. 제한업종에는 각종 조건을 강화하여 외자도입의 양보다 질의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위시장환기술정책은 광대한 시장을 첨단기술과 바꾸겠다는 정책으로, 이른바 돈만 가져오는 해외투자는 사양하고 선진기술을 가져와야 시장을 주겠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시장환기술 정책에 의해 기술흡수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선 시장을 내주어서 해외 기업이 들어오게한 후 기술을 흡수하여,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④ 중국의 FDI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법

삼자기업이란 합자(合資) 합작(合作) 독자(独资)를 인정하였고, 1995년6월과 1998년1월 및 2002년2월, 3차에 걸친 개정을 하여 외국인투자산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등 우대조치는 유지하면서 종래의 외국인 투자에 제한적인 조건등은 완화하여 개방경제에 적극대응하면서 FDI의 유입가능성을 제고하였다.

⑤ FDI유치하기 위해서 IT산업 수출산업과 대만기업 유치에 주력

2000년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국자본의 40%이상이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되었고 IT관련제품 중 시장이 포화화된 품목은 배제한 반면에 대만기업에 대한 동등우선(同等优先) 적당방관(适当放宽) 정책으로 우선권 주었다. 그래서 총

FDI중 대만계(홍콩 포함)건수와 금액 비중이 각각64.2%와 54.4%가 되었다⁵⁹⁾.

(2): 중국 외자도입의 전개

(1) 직접투자 도입기(1978 ~ 1983)

이 시기에는 개방정책의 발표와 함께 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구상이 제시된 시기이다. 이기간 동안에는 경제특구가 설치되고, 합자기업법이 제정되었으나,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관련 투자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도 홍콩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유입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렀다.

(2) 직접투자 촉진기(1984 ~ 1989)

본격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시작된 시기이다. 1984년에는 대외무역제도의 개혁과 도시 부문(공업경제)의 체제 개혁이 발표되었고, 14개 연해도시의 개방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개방지구가 설치되고,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의 개방 확대가 이루어 졌던 시기이다. 그리고 1986년에는 국무원22개조의 수출형 외국인 투자 기업을 우대하는 조치가 발표되었고, 이어서 1989년에는 연해발전전략에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유리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를 중심으로 투자환경의 정비가 이루어 졌고, 그 결과 이 기간 동안에 1984 ~ 85년에 걸쳐 두 차례의 ‘중국 투자 붐’ 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3) 직접투자 확산기(1992 ~ 2000)

이 기간 동안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이다. 천안문 사태에 따른 후유증으로 서방의 대중국 경제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1990 ~ 91년 동안엔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기간 동안 중국은 서방의 대외 개방 후퇴 우려를 불식하고 조정을 거치면서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로 부터 시작된 소위 ‘전방위’ 정책인 개혁개방 가속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전방위 개방정책에 따른 투자기회의 확대와 중국 경제의

59) 조현준, “국제지역연구” 『중국 FDI 정책의 목표 : 전개, 성과 및 과제』 제14권(3)호 (2005 가을), pp. 1-39.

고속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985~90년 연평균의 약 10배에 달하였다⁶⁰⁾.

외자도입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 역시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차관도입 위주에서 직접투자 유치 위주

중국이 대외개방을 시작한 초기인 1979-1983년 동안은 전체 외자유치 실적에서 차관에 의한 자금조달 규모가 8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후 중국이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차관을 억제함에 따라 직접투자가 전체 외자유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어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까지도 전체 외자유치 실적에서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여전히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32%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1년부터 급격히 증대하기 시작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힘입어 1992년부터 전체 외자유치 실적에서 차관과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1992년에는 전체 외자유치에서 직접투자 유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57%에 달하였으며, 1994년에는 78%까지 증가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외자도입의 주역은 1980년대까지 차관에서 1990년대에는 직접투자로 전환되었다⁶¹⁾.

④ 임가공생산기지 유치 위주에서 첨단기술 업종 유치 위주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단순조립 가공형 투자보다는 심가공, 기술집약적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와는 달리 당시 지역 단위의 경제적 현실은 아직 수출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기술 수준을 이유로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용창출과 수출증대가 기술 이전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단순조립 가공업종의 수출 업종에 대하여 증서부 내륙지방 투자를 제외하고 연해지방에 대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고 중국이 전방위 개방정책을 발표하자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노동집약적 외국인 투자의 과다한 유입이 자원의

60) 백권호, 외6명, 『현대중국경제』(서울: 교보문고, 2000), p. 432.

61) 백권호, 위의 글, p. 428.

배분을 왜곡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집약적 단순 임가공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GATT/WTO가입 준비를 위한 시장개방 조치의 반대급부로 세계적 초일류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본집약적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자동차, IT, 반도체, 통신설비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일류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주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 전방위 개방으로 시작된 업종개방의 확대로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투자 허용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에 중국은 제조업 외에도 부동산 개발, 금융, 무역, 유통업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상업과 무역업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은 물론이고 통신 서비스, 법률자문, 대리점업, 보험업, 관광, 항공운수업 등으로까지 투자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⑤ 지역경사 유치에서 산업경사 유치 정책

중국은 1980년대까지 동부연해지방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및 개발구 등을 설치하여 이들 특정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조세 감면, 공단 부지 및 사회간접자본 제공 및 외환금융 서비스 및 기타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일정한 우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투자유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지역’ 개발 내지 발전에 기초한 특혜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⁶²⁾.

199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은 이 같은 기존의 지역경사 정책을 폐지하고 산업경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단계적, 점진적, 개방정책의 이름 하에 추진된 지역간 불균형 발전전략이 가져온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평등 발전이 심화되면서 내륙지방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고, 산업간 불균형 심화가 경제발전의 장애가 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정치적, 경제적 정책 판단에서 비롯하였다. 중국은 현재 미래 첨단산업 분야를 위하여 통신, 교통망 등 사회 간접자본 분야, 농업 분야 등의 산업 분야에 유리하도록 현지금융, 원·부자재 우선 공급, 세계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1994년에 90년대 산업정

62) 백권호, 위의 글, p. 429.

책을 발표한데 이어서, 1995년에 각각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과 ‘외국인 투자업종 지도목록’을 각각 공포하고, 2002년 ‘목록’을 수정,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 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4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산업정책 방향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작하고 있다⁶³⁾.



63) 백권호, 위의 글, p. 430.

V. 박정희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의 외자도입성과 비교

1 한국 외자도입의 성과

(1)한국의외자도입이 경제개발계획측면에 미치는 영향:

제1차계획(1962-66년)은 처음부터 중대한 난관(소요외자의 조달곤란, 외국 자본의 비협력, 국내자본가층의 반발 등)에 봉착하고 계획 내용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한일협정’(1965년)의 체결과 그에 따르는 ‘대일청구권자금’(무상증여3억달러, 정부차관2억달러, 상업차관3억달러 이상)의 유입을 계기로 상황이 호전되고 성장률, 수출지표등 계획의 주요지표가 거의 달성되었다. 우선 실질 성장률의 실적이 연평균8.5%로 보완계획의 목표치5.0%를 3.5%나 상회함으로써, 그 결과 국민총생산 규모는 거의 1.6배로 확대되고 일인당GNP도1.3배로 증대되었다. 수출면에서도 1966년(계획최종년도)의 실적이 2억5,033만 4,000달러로 최초계획의 목표치1억3,750만달러의 1.8배에 이르고 있다⁶⁴⁾.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67-71년)이 실시되었으나, 이계획의 유형도 외자·수출주도의 고도성장(양적 확대)유형을 답습하고 있었다. 제2차계획의 실질성장률 실적은 연평균11.4%였다. 그리고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총생산 실적도 계획기간 중에 각각1.9배, 1.7배로 증대되었다⁶⁵⁾. 제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76년)에서는 ‘자립적 경제구조의 구축’이라는 종래와 같은 목표와 함께 새롭게 ‘균형화’와 ‘중화학공업건설’의 목표가 내세워졌다. 산업별 성장률에서 가장 높은 것이 광공업부문의 연평균20.1%이며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이 8.5%, 농림어업 부문 5.8%의 순위로 기록되어 있다⁶⁶⁾.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77-81년)에서도 여전히 종래 유형이 반복되고 외자·수출주도의 ‘고도성장’ 노선이 답습되었다. 주요지표 성장률이 연평균 9.2%, 국민총생산의 신장률 1.8배. 수

64) 강행우, 『한국경제론』(서울: 도서출판, 1988), p. 52.

65) 강행우, 위의 글, p. 53.

66) 강행우, 위의 글, p. 56.

출증가율 연평균 16.0%, 외자도입 예정액 100억달러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른바 ‘경제규모의 비약적 확대’에 의하여 후진국으로부터의 탈피를 도모한다는 것이다⁶⁷⁾.

(2)베트남전쟁이 한국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

- ③ 삼각무역-베트남 ‘특수’와 수출의 확대이다. 파병조건의 하나로 한국 기업과 노동자들도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진행할 권리를 얻었다. 1965-1972년 기간에 한국기업이 벌어들인 이윤과 군인, 노동자들이 받은 노임, 보상금은 약 7.5억 달러에 달했다⁶⁸⁾.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전쟁이 한국의 GNP증가율에 미친 여향은 1965년의 1.5%로부터 1970년의 4.4%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고있다⁶⁹⁾.
- ④ 노무송출과 외환보유고의 증가이다. 1965년 1년만 해도 해외노무송출 인원이 한국에 송금한 외화는 당년 상품수출액의 10.5%, 무역 이외 수입의 14.6%를 차지하였다⁷⁰⁾. 베트남 ‘특수’에 참가한 한국기술자는 베트남에 파견된 외국노동력 총수의 40%를 차지하였고, 그들이 본국에 송금한 노임과 보상비 등 각종 비용이 1.66억달러에 달하여 한국경제에 수혈하는 작용을 하였다⁷¹⁾.
- ⑤ 사회공공기초시설의 확충이다. 1966-1972년 기간에 한국이 도입한 외자는 도합35억 달러이며 그중에서 45.6%가 상업차관이고 공공차관이 11억 달러로서 외자도입 총액의 36.4%를 차지하였다⁷²⁾. 도입한 정부차관은 주로 발전소, 댐, 철도 및 고속도로의 건설에 쓰였는데, 경부고속도로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다. 상업차관은 주로 정유, 화학공업, 시멘트, 철강 등 전략적 기간산업의 건설에 쓰였다.
- ⑥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박정희가 과학기술에 대하여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었기에 과학기술의 요람이 될 과학기술원을 창립하기 위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⁷³⁾.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5만 명의 인재들을 모았고,

67) 강행우, 위의 글, p. 57.

68)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p. 330.

69) 조이제. 카터에커트 편저, 『한국 근대화, 기적의 과정』 (서울: 월간조선사, 2005), p. 506.

70)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p. 330.

71)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p. 151.

72) 유병용, 『1960년대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1999), p. 80.

이들은 한국의 산업화기반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 ⑦ 군사원조액수의 증가이다. 1961-1965년에 한국이 미국에서 받은 무상 군사원조는 매년 약1.37억 달러였으며, 참전한 1966-1973년 까지 원조는 1.77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군비지출을 감소시켰고 한국군의 현대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⁷⁴⁾.

베트남 ‘특수’와 한일관계 정상화는 1960년대 후반기 한국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한 두 개의 엔진이었다. 1966-1969년 까지 GNP의 연평균성장률은 11.8%로서 1960년대 전반기 5년의 경제성장률 5.5%의 2배 이상이었다. 외환보유고는 1964년의 1.29억 달러로부터 1970년의 5.84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한국-미국-일본의 성장트라이앵글과 베트남 ‘특수’ 및 한국-미국-베트남 성장트라이앵글은 모두 한국경제도약의 핵심적인 고리가 되었다⁷⁵⁾.

베트남 파병은 여러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우선 파병군인의 월급 등으로 외환 수입이 늘어났다. 파병으로 인한 외환 수입은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총 6억 2000만 달러에 달했고, 이 돈은 1967년에서 1971년까지 추진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적인 재원으로 쓰였다. 만일 베트남 전쟁이 없었다면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⁷⁶⁾.

(3) 경부고속도로 개통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을 통해 확보한 개발 자금으로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이자, 차츰 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의 연평균 GNP 성장률은 9.5%였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의 7.9%를 뛰어넘는 성과였다. 1969년에는 농림어업·광공업·서비스업의 비율이 각각 38%, 20%, 36.8%였는데, 1970년에는 26.6%, 22.5%, 41.4%로 변화했다. 도시화·산업화로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서비스업 분야로 대거 이동한 결과였다. 특히 2차 경제개발 기간에는 광공업 생산이 목표치 10.7%를

73) 이병천, (1998), p. 266.

74)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p. 152.

75) 김광희, 위의 글, p. 153.

76)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서울: 역사비평사, 2007), p. 85.

넘어19.9%의 실적을 보였는데, 제조업으로만21.8%의 성장을 기록했다.

1967년에3억 달러였던 수출이1970년에는10억달러를 넘어섰다. 1964년에1억 달러 수출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 을 제정한 지 6년 만에10억 달러를 달성한 셈이었다. 그래서 1970년11월30일의 ‘수출의날’ 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 1967년1월30일에는 외환은행이 발족되었고, 5월31일에는 마침내 외환 보유고가3억 달러를 돌파했다.

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은 수출 기반이 확충되면서 수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1966년부터 정부는 산업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 시작했다. 1968년에는 국내에서TV수상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고, 1969년8월8일에는 문화방송이 개국했다. 이와 함께TV 광고가 시작되었는데, 1968년에는 코카콜라, 1969년에는 펩시콜라의 광고가 방영되었다.

한국경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에 깊숙이 편입된다는 전제를 안고 있었다. 1965년에 일본에 대해 수출이 4400만 달러, 수입이 1억6700만 달러로 적자가 1억 2300만 달러였다. 또한 1970년에는 수출이2억3400만 달러로 증가한 데 반해 수입은 8억1300만 달러로 급증해, 무역 적자가5억7900만달러로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과의 무역 적자뿐 아니라 전체 무역 적자도 1965년의 2억8830만 달러에서1971년에는13억2670만 달러로 증가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하면 할 수록 일본으로부터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타개해야만 했다. 그래서 1967년7월25일에 포지티브 시스템(수입 금지 품목을 열거)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수입 가능 품목 외에는 모든 수입을 금지)으로 불가피 하게 전환했다⁷⁷⁾.

1970년7월7일에는 마침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 공사’ 라고 불렸고, 근대화의 성공적 진전을 상징하는 사례로 비춰졌다. 박정희는 ‘이 공사는 민족의 피와 땀과 의지의 결정이며 민족적인 대예술작품’ 이라고 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속전속결로 목표를 달성하는 박정희 방식이 잘 들어맞았다. 원래 1971년이 개통 예정이었으나,

77) 조희연, 위의 글, pp. 113-117

무려 1년을 앞당겼다. 물론 고속도로 건설을 서둘렀던 데는 1971년의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몰고 왔다. 우선 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는 물론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중간계층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1966년에 서울의 자동차 수는 1만3000여대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71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만도 6만7000여대에 이르렀다. 승용차 외에 화물차를 포함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1960년대 후반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970년대 말에는 50만 대에 이르게 된다. 비록 자동차 산업은 초기 단계였지만, 근대화의 성공적 상징으로서 그 역할은 대단히 컸다.

이동도 급물결을 탔다. 도시에 대한 전망은 더욱 커졌고, 그 결과 이농 현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0년에는 서울에 1960년대의 2배에 가까운 550만 명이 거주하게 되었다. 1960년대 말의 도시, 구중에서도 서울은 ‘희망의 땅’이었으며 전망의 상징이었다⁷⁸⁾.

의심할 바 없이 미국의 원조는 일정한 정도에서 한국의 1960. 1970년대 고속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미국은 그의 강대한 경제실력에 의거하여 한국경제를 지원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자본과 기술 공급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외교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줄곧 한국의 최대의 투자국이자 최대의 무역대상국과 기술 공급원이었다⁷⁹⁾.

78) 조희연, 위의 글, pp. 113-117.

79) 김관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p. 81.

2 중국 외자도입의 성과

1983년 중국은 국무원 주최로 ‘전국외자이용촉진회의’를 개최한데서 외자유치의 방향을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로 돌려야 하며, 외국정부및 국제금융기구가 제공하는 저리와 장기차관을 쟁취해야 하며, 단기적인 상업차관을 가능한 한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특히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는 투입 자본에 대한 상황과 이자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투자의 위험부담도 없으며 또 외국의 선진기술 설비를 끌어들여 수출경쟁능력을 증가시키며, 더욱이 취업인구를 증가시켜 사회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외자유치의 수치를 보면, 대외차관금액은 2백95억달러로 실제 사용한 외자총액의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단지 1백22억달러로 실제 사용 외자총액의 30%를 차지한다. 이렇듯 7:3의 비율로 발전하는 추세는 중국이 당초 외자유치를 할 때의 외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중국의 투자환경이 이상적이 못되어 외국기업이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원금과 이자 지불이나 위험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고, 투자이윤에 대해서는 외국기업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직접투자는 갈수록 적어지고, 국제차관의 비율이 날로 높아져 국고에 누적되는 부채율도 갈수록 무거워지며, 앞으로의 외채상황능력의 위기도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외자를 유치해오는 국가나 지역을 보면, 먼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면에서 볼 때 주로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의 자본이며, 다음이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호주 등이다.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에 연접해있어 지리적으로 편리하여 1979~87년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의 50.4%를 차지하고 있다⁸⁰⁾. 그러나 방대한 투자능력을 가진 미국. 일본. 서유럽 나라들의 투자율은 낮다.

최근 수년간 중국이 유치한 외국기업의 투자액은 같은 기간 미국의 자본수출액의 0.4%이고, 서유럽 자본수출액의 3%이며, 일본 자본수출액의 10%이다⁸¹⁾. 정부차관면에서 볼 때 1988년 5월까지 중국이 얻어낸 10여개 국가의 정부차관은 일본이 대중을 이루며 외국정부차관의 42.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이탈리아로 20.8%, 프랑스가 8.1%, 캐나다가 6.9%, 영국이 6.6%이다, 1988년 8월

80) 李孝全, 『國際資本流動趨勢與我國利用外資政策調整研究』(北京:國際貿易, 1988), p. 8.

81) 李孝全, 위의 글, p. 6.

다케시다일본수상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8천1백억엔(약61억달러)의 정부차관을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게 했다.

외자투입의 구조로 볼 때, 중국은 외국자본의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이를 각 산업에 정확하게 운용하려 했다. 예를 들면 ‘삼자기업’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이전되지 않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리 재능과 수출의 길을 충분히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계. 전기공업. 경공업. 방직 등 전통산업의 기술개조를 추진하려 했다. 그리고 “三來一補”의 방식으로는 중소기업과 농촌기업의 자본축적을 유도하여 외향형으로 발전시키려 했으며, 국제기구의 자금의 힘을 빌려 에너지. 교통 등의 기초시설과 기초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농업. 수리. 교육. 위생 등의 항목을 점차 발전시키려 했으며, 외국정부의 차관을 이용한 원자재공업을 중점적인 발전, 상업차관을 이용한 수출창출기업과 효과가 비교적 빠른 기업개조 항목의 발전에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해의 실천을 통해 본 결과 중국이 중점적으로 시도했던 외국기업의 기계. 전자. 에너지. 교통통신과 원자재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은 극히 낮았고, 오히려 호텔. 아파트. 위락시설 등 관광서비스분야의 항목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아졌다. 1979~87년까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자본이 호텔 및 서비스업에 투자된 비율은 외국기업의 투자총액의 43%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에너지분야 투자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분야 투자의 대부분은 해양석유탐사에 쓰여졌다) 경공업·방직업이 11%, 전자·기계업이 6%, 원자재분야가 4%, 농·목·어업에 2%를 투자하고 있다.

외자투입지역으로 볼 때, 대외차관을 사용하는 건설항목의 선정은 중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자금투입지역이 비교적 분산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의 투자기업은 모두가 중국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87년말까지 외국기업이 중국 각지에 투자한 기업은 1만8개소이나 그중9천6백개소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그 비율이 95%를 능가하고 있다⁸²⁾. 가장 집중된 지역은 광둥성(6천1백11개소)과 복건성(1천20개소)이고 외국기업의 투자액의 각기 61%와 10%를 차

82) 李孝全, 위의 글, p. 7.

지하고 있다.

중국측에서 보면FDI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 실제로 그런 효과가 존재하였다. 요컨대 ①투자자금의 도입, 즉 부족한 국내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효과이다. ②선진적 기술도입, 말하자면 합병과 100% 자회사 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자본설비에 포함된 기술을 가지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조작기술도 전수해 준다는 것이다. ③합리적 경영방식의 흡수, 즉 중국 기업개혁에도 공헌한다. ④고용확대 ⑤외자획득이라는 효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FDI의 역할은 변화한다. 초기에는 투자자금과 외자획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외자라도 환영받았다. 그러나 차츰 외자를 선별하게 되어 중국이 중시하는 산업과 업종, 특히 하이테크 등 근대적 기술을 가진 외자도입이 중시되고 있다⁸³⁾. 기술도입 계약은 1985년에826건(32억 달러)였지만 90년에 들어 가속화되어 95년에는3629건(130억 달러)로 상승했다. 도입방식에 있어서는 플랜트(기간설비를 포함) 수입과 라이선스 생산이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기술 컨설팅·서비스나 공동생산 등이 있다. 업종별로 보면 80년대에는 기계·전자와 경공업(방직을 포함)이 가장 많았고, 통신·교통과 야금·금속이 이 뒤를 있고 있다. 95년에도 기계·전자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경공업 (방직을 포함)은 후퇴하고 통신·교통과 에너지가 증가했다⁸⁴⁾.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1993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 동안 다소 주춤하는 듯했던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규모는WTO가입첫해인 2002년도에527억 달러를 넘어서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전반기 ‘사스’ 파동에도 불구하고 537억 달러를 유치 하였다. 누계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총액이 2003년 말 현재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에 따른 시장확대 전망과 WTO가입 이후 중국 시장 개방 확대의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 개방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양질의 값싼 인건비 조달 차원에서 중국에 진출하던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진출전략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83) 유희문,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고, 2004), p. 433.

84) 미나미료신, 마키노후미오, 박정동 역, 『중국경제입문』 (서울: 생능, 2007), p. 216.

전기를 제공해주었다. 1993년부터 2002년 까지 10년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 가운데 300개 기업이 중국에 투자, 진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가공 조립생산을 넘어서서 연구개발, 디자인 기술센터, 마케팅 및 판매 서비스 등 기업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기능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이제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변화와 구조조정으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물류 등 서비스 업종까지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중국 시장진입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중국에서는 초일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M&A에 기초한 지배구조의 재조직 및 산업조직 구조의 조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심축 가운데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공업총생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을 넘어서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다. 외자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투자전략이 종전의 수출생산기지 전략에서 중국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을 통합하는 글로벌 전략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⁸⁵⁾.

20여 년간에 걸친 대외개방정책의 결과 대량의 외자가 중국에 유입되었다. 특히 1992년 이래 외자의 중국진출은 눈부시다. 외자는 이 시기의 중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경제의 국제화, 시장화의 진전, 기술이전과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수출진흥, 고정자산투자의 확대, 고용의 창출 향진기업과의 합병과 국유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국내기업의 활성화 등이 외자도입이 중국경제에 미친 효과로 지적된다⁸⁶⁾.

85) 유희문,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고, 2004), p. 433.

86) 미나미료신, 마키노후미오, 박정동 역, 『중국경제입문』 (서울: 생능, 2007), p. 211.

VI.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외자도입의 배경은 대내적배경과 대외적배경으로 나누었다. 외적배경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가 복구되고 경제적 쇠퇴와 무리한 대외팽창정책으로 군사비 지출, 군사, 경제 원조 지출로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한국에 대한경제정책이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한일회담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는 미국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일본 역시 국내과잉 축적된 자본을 유출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필요한 것이었다. 내적배경은 전쟁 이후 한국경제는 악성순환으로 진입하였는바, 저수입 → 저저축 → 저투자 → 저생산 → 저소득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화의 가속도발전 및 실업의 증가로 한국의 경제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갔다. 박정희는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국내자본 조달에 실패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경제정책이 ‘외자’ 도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내세웠으며, 베트남 파병과 한일회담을 통한 외화벌이와 외자도입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국의 외자도입의 배경은 내·외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적배경은 덩샤오핑의 집권과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추진이 정치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해온 덩샤오핑이 집권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경제발전이었다. 중국은 산업기술 수준이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관리기법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체제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능률적 제도의 바탕 위에서 투입될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자본과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중국의 입장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또 다른방면에 중국이 장기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엄청난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런 막대한 재원의 공급원으로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눈을 돌렸다. 이것은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 목표의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외부적 배경은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1970년대 말부터 추진하게 된 데는 그때의 국

제적인 정치와 경제정세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중국의 안보상황은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팽창주의로 인하여 크게 위협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중시했던 제3세계와의 연대는 큰 힘이 되지 못하였다.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는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연합세력을 중국은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가장 적합한 연합의 대상으로서 미국과 일본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이 미·일과의 관계를 확대함에 따라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도 중국과 직접적인 경제교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제4장을 보면 한국외자도입의 방식은 한국이 경제개발계획을 급속히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외자의 도입이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경제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발전자금 기술과 시장에 대한 한국의 필요성은 날로 강해져, 외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첫 조치는 외자도입법(1966)의 개정을 들 수 있다, 해외에서 자기 신용으로 기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는 이 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해외기채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내 저축이 저조했던 당시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해외자본유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게되었다. 또 다른 방면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정권의 정통성 부재라는 정치적인 한계를 경제발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베트남파병은 경제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한 돌파구였던것이다. 베트남파병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열악한 산업기반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박정희 정부의 정통성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한국의 외자도입의 전개과정은 3 시기를 나눌수 있다, 제1시기(1959-65년)는 1959년1월 최초로 동양시멘트 시설확장을 위하여 미국의 개발차관기금(DLF, Development Loan Fund)으로부터 214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차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1965년6월 한. 일간의 국교가 재개될 때까지, 이른바 외자도입을 위한 제도정비기이다. 제2시기(1966-72년)는 일본의 대외자본수출의 요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역할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의 요구가 합쳐져서 무리하게 타결된 한일회담에 의해 일본 청구권자금이 유·무상이 합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그와 함께 일본 상업차관을 비롯하여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등으로부터의 상업차관이 극히 왕성하게 들어온 시기이다. 한 마디로 이시기는 상업차관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제3시기(1973-79년)는 차관원리금의 상환압박에 부딪치자, 정부는 두 가지 정책대안으로 타개를 시도했고, 하나는 차관을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다른 하나는 수출의 강화를 통한 원리금 상환 능력의 확대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게 된다.

중국이 외자를 유치하는 데는 두가지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로부터의 자금도입에 의한 간접투자이다.

간접투자는 외국정부차관, 국제금융기구차관, 해외공채발행으로3가지를구성하였다. 중국이 대외 개방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투자환경은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며 외자도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 더욱이 1992년 봄에 덩샤오핑이 소위 남순강화를 발표한 이후 외자는 폭발적으로 중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수단은 주요 경제특구의 개방 과 FDI정책을 실시를 들 수 있고, 중국의 대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 개방 지역도 점차로 확대되었는데, 경제특구와 연안 개방 도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 특구란 국가가 경제개방의 필요에 따라 해외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 국내법적인 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외 개방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특별 경제 구역이다. 중국은 1978년 대외개방이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설치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경제이념으로 채택하는 등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추세가 더욱 진전되었으며 또한 대외개방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내륙으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외자도입의 전개 과정도 3기간을 나눌 수 있다. 먼저, 직접 투자 도입기(1978 ~ 1983)에는 개방정책의 발표와 함께 직접투자 유치정책을 수립,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구상이 제시된 시기이다. 두 번째로, 직접투자 촉진기(1984~1989)에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시작된 시기이다. 세 번째로, 직접투자 확산기(1992~2000) 동안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이다. 외자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직접투자 유치를 위주로 하였고, 첨단기술 업종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경사 유치에서 산업경사 유치 정책을 말한다.

제5장 외자도입의 성과를 보면 한국은 1965년 6월 최종적으로 협정이 체결된 김종필-오히라 회동⁸⁷⁾을 통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를 제공받았고, 일본으로부터의 자금은 대부분 산업설비재 도입과 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사용되었다. 무상지급 3억 달러는 그 사용처로 정부는 상당부분을 포항제철 건설 등 산업화를 위해 집중투자 하였다. 포항제철건설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무상자금 7천만 달러, 공공차관 5천만 달러 등 총 1억 2천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2억 달러의 정부차관은 소양강댐 건설, 경북고속도로 건설, 발전소, 철도시설개량 및 확충, 수송 및 하역시설 확충, 그리고 체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쓰였다. 나머지 3억 달러의 상업차관은 화학섬유공업, 비료공업, 시멘트공업 시설의 구매 등에 사용되었다⁸⁸⁾. 한국정부가 베트남과 병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하면, 미국의 직·간접 지원과 베트남 전쟁 특수 활용, 그리고 국내기업과 근로자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효과 등을 계산할 경우 총 외화수입은 대략 5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한다⁸⁹⁾. 또한 외국의 차관 및 투자증가,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획득 등 간접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87) 김종필 오히라 각서

- 3) 무상원조에 대해 한국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바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는 조건으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 4) 유상원조(해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해 한국측은 2억 5천만 달러(이자율 3% 이하, 7년 거치 20-30년 상환) 일본측은 1억 달러(이자율 3.5%, 5년 거치 20년 상환)를 주장한바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이자율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제공하기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 5) 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해 한국측은 별개 취급을 희망하고 일본측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토록 추진한 것을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88) 정시구, “한국행정사학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통권 제16호(2005), p. 23.

89) 정성화, 『박정희 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p. 4.

이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훨씬 초과한 연평균8.5%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외자도입의 성과는 정부차관면에서 볼 때, 1988년5월까지 중국이 얻어낸 10여개 국가의 정부차관은 일본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정부차관의 42.2%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이탈리아로 20.8%, 프랑스가 8.1%, 캐나다 6.9%, 영국이 6.6%이다, 1988년8월 다케시다일본수상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8천1백억엔(약61억달러)의 정부차관을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게 했다. 외자투입의 구조로 볼 때, ‘삼자기업’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쉽게 이전되지 않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리 재능과 수출의 길을 충분히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계·전기공업·경공업·방직 등 전통산업의 기술개조를 추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자투입지역으로 볼 때, 대외차관을 사용하는 건설항목의 선정은 중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자금투입지역이 비교적 분산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의 투자기업은 모두가 중국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측에서 FDI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1. 투자 자금의 도입, 2. 선진적 기술도입, 3. 합리적 경영방식의 흡수, 4. 고용확대 5, 외자획득이라는 효과이다. 20여 년간에 걸친 대외개방정책의 결과는 대량의 외자가 중국에 유입되었다. 특히 1992년 이래 외자는 중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중국경제의 국제화, 시장화의 진전, 기술 이전과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수출 진흥, 고정자산투자의 확대, 고용의 창출, 향진기업과의 합병과 국유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한 국내기업의 활성화 등이 외자도입이 중국경제에 미친 효과로 지적된다.

한국		중국	
배경	외적: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쇠퇴 무역수지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 → 유상 차관 베이스로 전환한다. 일본은 국내과잉 축적된 자본을 수출시키기 위해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필요로 하였다.	외적: 1970년대 말 국제정치와 정세의 급격한 변화, 군사적 압박을 가해오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가장 적합한 연합의 대상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선택하였다.	내적: 중국경제: 산업기술 낮고 생산관리기업 수준도 낮은 상태였다. 중국의 장기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했다. 지도자층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경제발전이었다.
	내적: 한국경제: 저수입 → 저저축 → 저투자 → 저생산 → 저소득. 사회문제는 인구급증과 및 가속도 도시화, 실업증가, 지도자층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극복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내세웠다. 박정희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미국의 압력으로 경제정책이 “외자” 도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방식	외자도입 형태는 주로 차관이다	3. 외국기업 직접투자	1. 해외로부터의 자금도입에 의한 간접투자
전개	제1시기(1956-65년) 제도 정비기 제2시기(1966-72년) 차관의 전성기 제3시기(1973-79년)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	1. (1978-1983) 직접투자 도입기 2. (1984-1989) 직접투자 촉진기 3. (1992-2000) 직접투자 확산기	
성과	양국 다 외자도입을 통해서 투자자금도입, 선진기술 도입, 합리적 경영방식의 흡수, 고용확대, 외자 획득 등 성과를 얻었다.	선진기술 도입, 합리적 경영방식의 흡수, 고용확대, 외자 획득 등 성과를 얻었다.	

참고 문헌

한문자료

-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서울: 조선일보, 2001.
- 조갑제, 『박정희: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 서울: 조갑제닷컴, 2006.
-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서울: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서울: 동서문화사, 2006.
- 유희문,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론』 서울: 진명출판사, 1995.
- 유희문,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론』 서울: 진명출판사, 1995.
- 조수현, "한국정책연구,"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전략과 외자도입정책을 중심으로』 제9권제2호(2009).
-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연구총서, 2008.
- 강행우, 『한국경제론』 서울: 도서출판, 1988.
- 임종철, 『한국경제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1999.
- 이대근,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사』 서울: 나남출판, 2005.
- 손호철,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서울: 이매진출판사, 2006.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서울: 나남출판, 2004.
- 와나가키요시, 정후식 역, 『13억 중국시장의 이해』 서울: 진리탐구, 2002.
- 나카가네카즈지,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출판, 2001.
-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대외경제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출판사, 2008.
- 조에제. 카터에커트 편저 『한국근대화기적의과정』, 서울: 월간조선사, 2005.
- 합동통신사, 편집부 저, 『합동년감』 서울: 합동통신사, 1959.
- 조갑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서울: 조선일보사, 2001.
-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 리영희, 임현영, 『대화』 서울: 한길사, 2005.
- 유병용, "박정희정부와 한일협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1999.

임효, 『한국경제발전의 정치 분석』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1995.

좌승희,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 새로운 발전모형과 공정사회』 제4권제1호 (2011).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박근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베트남전쟁』 도쿄: 어차의 책방, 1993.

홍규덕, 『1960년대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1999.

역사학연구소, 『함께보는한국근현대사』 서울: 서해문집, 2004.

정시구,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사학지, 2005.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울: 서해문집, 2004.

이회석, "부산대 무역대학원," 『우리나라 외자도입의 현황과 그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107호, (1985).

이대근,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서울: 착각사, 1987.

고준식, 박기철, 『한국경제사1876-1979』 서울: 동녘, 1989.

조준현,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 관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진홍상, "경희대학교 경제연구"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사회의 변천에 대한 소고』 제17집 (2001).

조준현.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중 관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최백렬. "국제경영리뷰"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제8권(1)호(2004).

조현준, "국제지역연구" 『중국 FDI 정책의 목표 : 전개, 성과 및 과제』 제14권(3)호 (2005).

백권호, 외6명,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고, 2000.

강행우, 『한국경제론』 서울: 도서출판, 1988.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조이제. 카터에커트 편저, 『한국 근대화기적의 과정』 서울: 월간조선사, 2005.

김일영, 『1960년대의 정치사회변동』 서울: 백산서당, 1999.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유병용, 『1960년대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1999.

김광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서울: 역사비평사, 2007.
김관희, 『박정희와 개발독재』 서울: 선인한국학 연구총서, 2008.
유희문, 『현대중국경제』 서울: 교보문고, 2004.
미나미료신. 마키노후미오, 박정동 역, 『중국경제입문』 서울: 생능, 2007.
정시구, “한국행정사학지”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주도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통권제16호(2005).
정성화, 『박정희 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서울: 선인, 2005.

중문자료

鄧小平, 『鄧小平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83.
羅元錚, 『世界經濟與中国』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3.
胡征慶, 『中國對外開放政策』 成都: 成都科技大學出版社, 1989.
李孝全, 『國際資本流动趋势与我国利用外资政策调整研究』 北京: 國際貿易, 1988.

영문자료

Zhang Zhuoyuan, “China’ s Economy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Lin Wei and Arnold Chao eds, *China’ s Economic Reform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2.
Liu Guoguang, Liang Wensen and Others, *China’ s Economy in 2000* Beijing: New Worle Press. 1987.
Richard Baum, *China’ s Four Modernizations: The New Technological Revolution*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80.

인터넷 자료

장세정. “등소핑을 통해 보는 개혁 개방.” <http://blog.joinsmn.com/media/index.asp?uid=zhshzh> (검색일: 2012.10.4)
소 주 현 . “ 한 국 의 경 제 발 전 과 외 자 도 입 정

책

.” <http://naver.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DMT1200002352&sysid=nhn>(검색일 2012.10.01).

